2025

KSP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 공유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CONTENTS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KSP 소개 및 연혁 06
KSP 사업 현황 08
2024/25 KSP 추진 현황 10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12

2. 2024/25 KSP 동향

KSP의 변화: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창출로 16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18
· 아시아·오세아니아 18
· 유럽·중앙아시아 32
· 중남미 47
· 중동·북아프리카 60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3

3. 2025 KSP 행사 소식

2025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72
2025 KSP 지역세미나 74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 76
KSP 사업설명회 77

4. KSP 성과 모니터링

KSP 중기 성과 모니터링 80

[별첨] 2024/25 KSP 사업 목록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 KSP 소개 및 연혁
- KSP 사업 현황
- 2024/25 KSP 추진 현황
-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식은 오늘날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파트너십 구축, 주인의식 제고, 역량 개발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동 번영을 도모합니다.

한국은 ODA에 의존하던 수원국에서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협력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출범시킨 이래, KSP는 2024/25년 기준 102개 협력국 및12개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선도적 지식 공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SP 연혁

2004년 출범 이후, KSP는 국제사회의 수요와 호평에 힘입어 점차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자문의 품질과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4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시작



2006
- 제1회 성과전파 세미나 개최(現 성과공유 컨퍼런스)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04 KSP)



2008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FIEZ) 설립('07 KSP)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 방한('06)을 계기로 중남미 KSP 사업 개시



2009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
- 중점지원사업 시행('09-'15)
- 베트남 신용보증제도 도입('08 KSP)



2010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실시('10-'15, 148개 주제별 한국발전경험)
- KSP 현지 전문가 제도 도입



2011
-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 'KSP 발전방안' 발표(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수석고문제도 도입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 발전 전략' 채택('09-'11 KSP)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IDB) 연계, 한국전력 수주

2012
- 제1회 지역별 세미나 개최(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 KSP 차세대리더 육성 프로그램(YKSP) 도입
- 인도네시아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KOICA) 연계('12 KSP)
- 한국-사우디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및 양자 기술협력 지속('10 KSP)

2013
-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2013-2016년, 25건 수행)



2015
- 「KSP 10년사」 발간
- 협력국 확대('04년 2개국→'15년 44개국)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EDCF-IDB) 연계 ('13 KSP, 자문관 파견 및 한국기업 참여)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출범('08-'14 KSP)

2016
- UAE 특허 시스템(450만 달러) 수출('14 시스템 컨설팅)
- 라오스 투자촉진법 개정 및 중앙투자촉진감독위원회 설치('15-'16 KSP)
- 사우디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개발센터 설립('10-'13 KSP)
- 한국 국토부-쿠웨이트 스마트시티 MOU 체결 및 압둘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연계('14 KSP)

2017
- 'KSP 2.0 발전방안' 발표 (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사업(KOICA) 연계('12 KSP)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시행령 개정 및 보증제도 활용 확대('16-'17 KSP)

2018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사업 연계('17/'18 KSP)
- 스리랑카 중등교육 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EDCF) 연계('16/'17 K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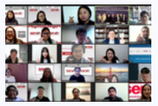
2019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CCAI) 개소('16) 및 확산(5개) ('12-'15/'16 KSP)
- 콜롬비아 국가시험소정책 마련('17/'18 KSP)
-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15-'19/'20 KSP)
- 튀니지 전자조달사업(KOICA)-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협력센터 사업 연계 ('18/'19 KSP)

2020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출범(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 코로나 대응 긴급사업 실시(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파라과이),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자문
- 베트남 최초 PPP 법률 제정('18/'19 KSP)
- 해양수산부 페루 까야오 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연계('19-'20)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EDCF 및 EIPP 사업 연계('18/'19 KSP)
- 행정안전부 세르비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공동협력 과제 연계 및 기업 진출('19/'20 KSP)

2021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제3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체계 개혁 대통령령 제정('18 KSP) 및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EDCF 사업(1.2억 달러) 연계('18/'19 KSP)
- 몽골 증권시장결제시스템 개선 및 FTSE 관찰 대상국 재편입 ('17/'18 KSP, 한국예탁결제원 장기 파견)

2022
- 민간사업 제안제 도입
- 헝가리 홈택스 벤치마킹 납세자 통합포털 도입('20/'21 KSP)
- 콜롬비아 2022-26 국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 부흥정책 반영, 공공 협의 디지털 플랫폼(SUCOP) 개선('21-'22)
- 에티오피아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반영 및 기술국 신설('19/'20 KSP)
- 산업통상자원부 '파라과이 자동차부품 센터 조성 및 전기차 시범보급 사업' 연계('21/'22 KSP)

2023
- KSP 우수 수행기관 인증제 시행
- 페루 대국민서비스 강화법 제정('20/'21 KSP)
- 가나 조세정책 중기전략 수립('17-'19/'20 KSP)
- 알바니아 탄화수소 연구기관 설립 법률 제정('20/'21 KSP)
- 중소벤처기업부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도입 사업 연계('22/'23 KSP)



2024
-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발표(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 확대 - 호주('22/'23, '24/'25), 영국, 스페인
-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정책 2024-2035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상 반영('21/'22 KSP)
- 아르메니아 혁신기업가 육성허브 설립 및 신용보증기금 조성('22/'23 KSP)

2025
- 2025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의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연계 개최 ('25.10.21/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 2025년 중남미 지역세미나를 UN ECLAC과 공동 개최 ('25.9/칠레 UN ECLAC 본부)
-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 확대 - 스웨덴(25/26), 이탈리아(25/26), 영국(24/25, 25/26), 스페인(24/25), 호주(22/23, 24/25)
-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디지털 등록시스템 도입('24/25 KSP) 자문이 NIA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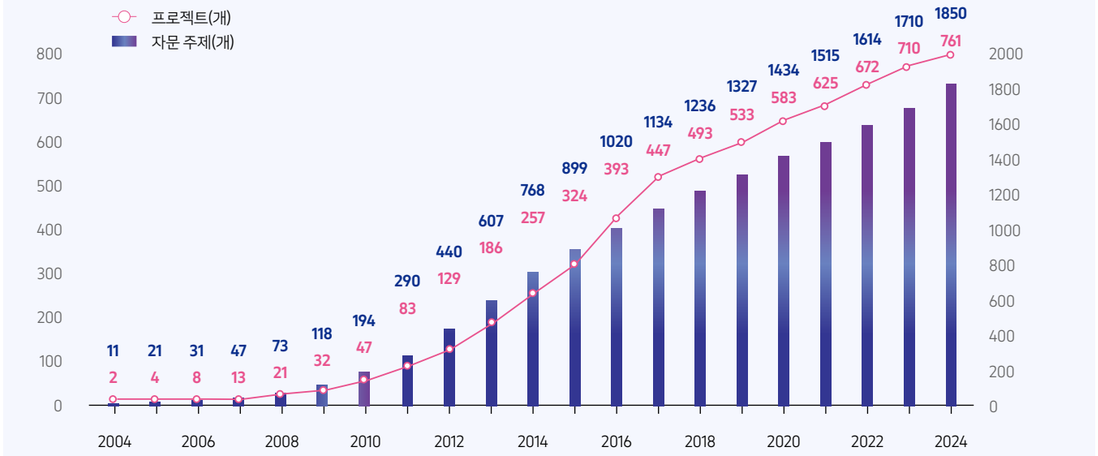
KSP 사업 현황

KSP 프로젝트 현황

KSP는 2004년 출범 이후 2024/25년까지 700여 개의 프로젝트와
1,850건 이상의 자문주제를 통해 협력 수요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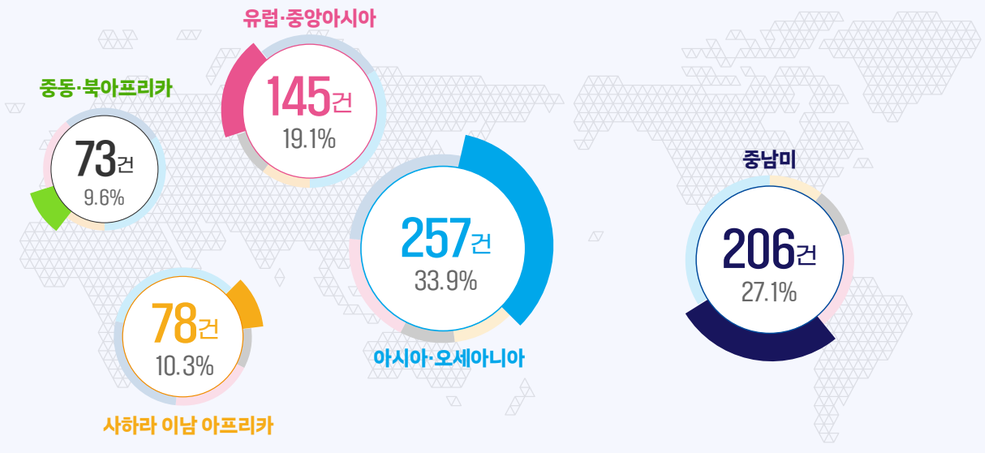
프로젝트 및 자문 주제 수 변화 추이
(2004년-2024/25년)

(단위: 건)



지역별 프로젝트 수

※복수 지역 대상 실시 사업 2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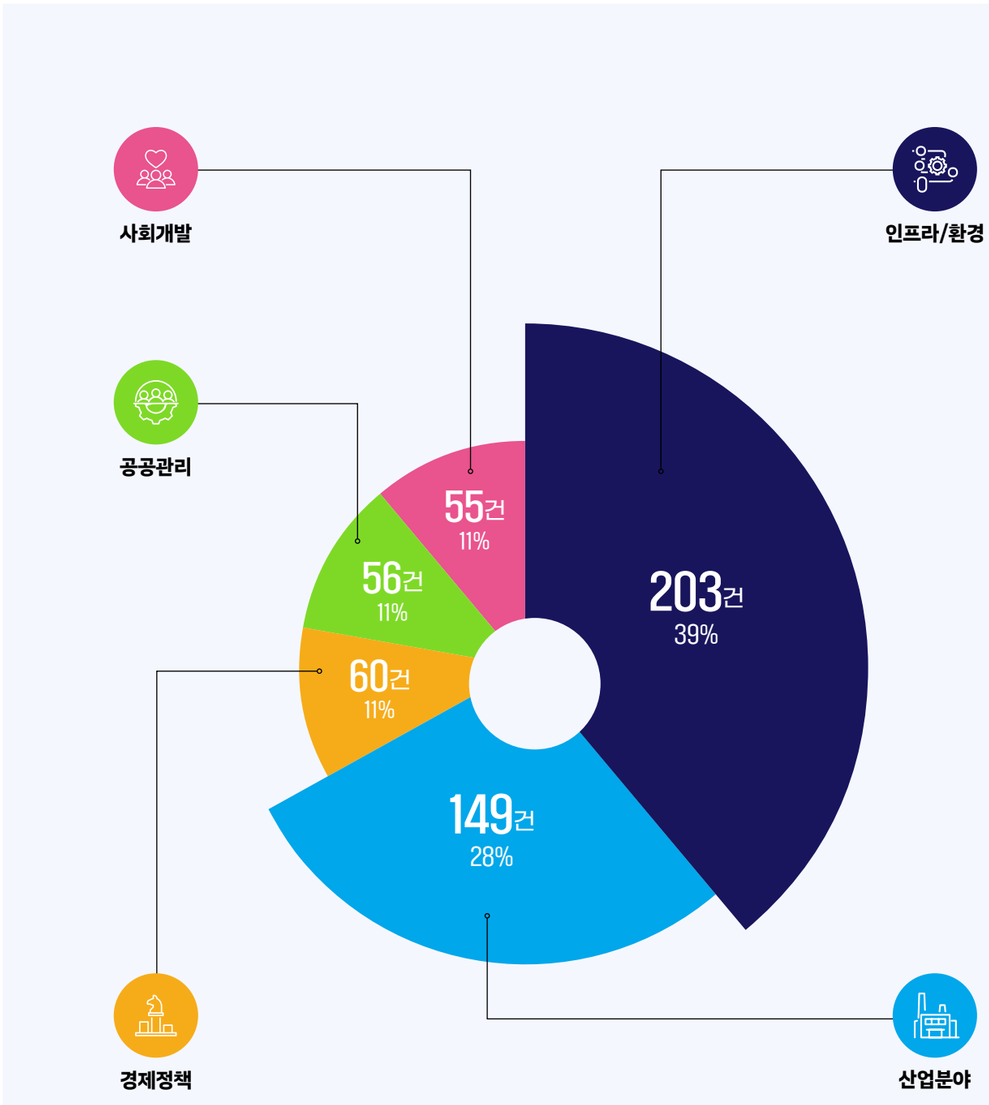


KSP 자문 주제

KSP 자문주제는 경제정책 및 산업분야에 더해,
최근에는 인프라·환경 분야로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KSP 분야별 자문 주제 수 변화 추이
(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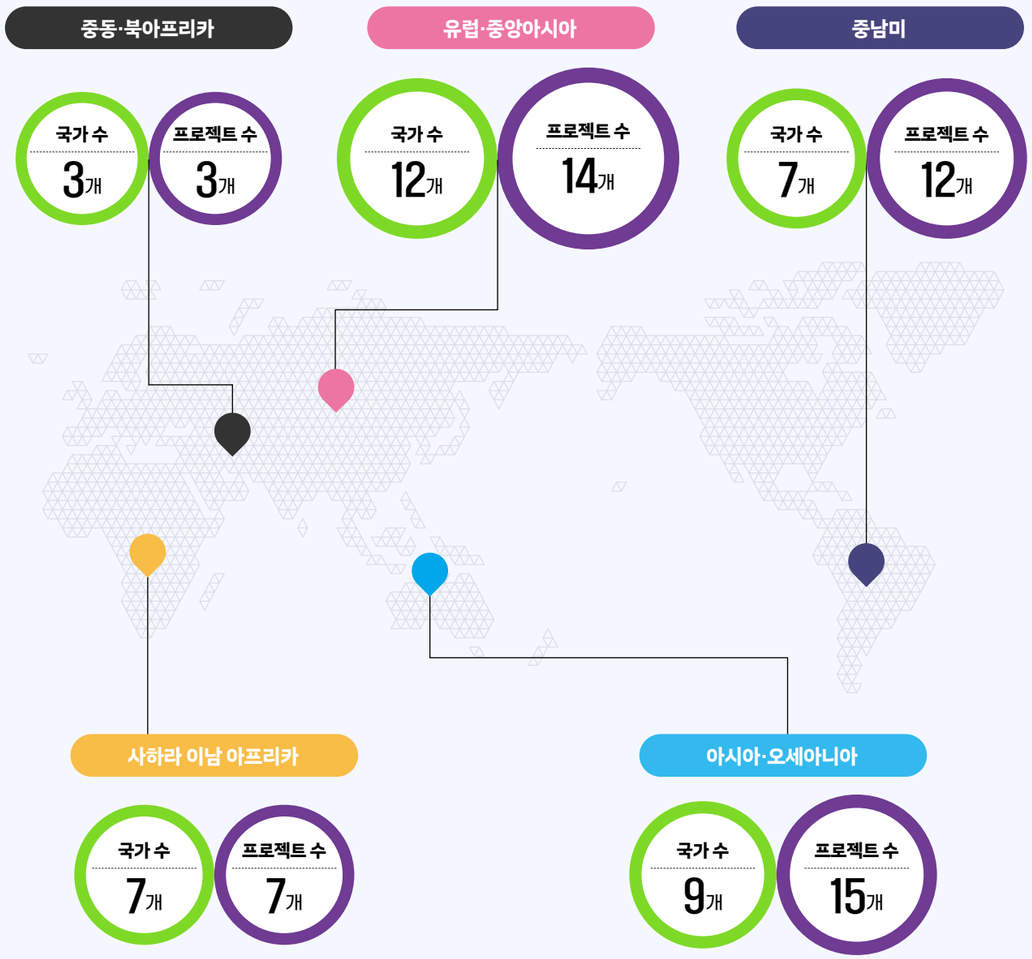
(단위: 건)



2024/25 KSP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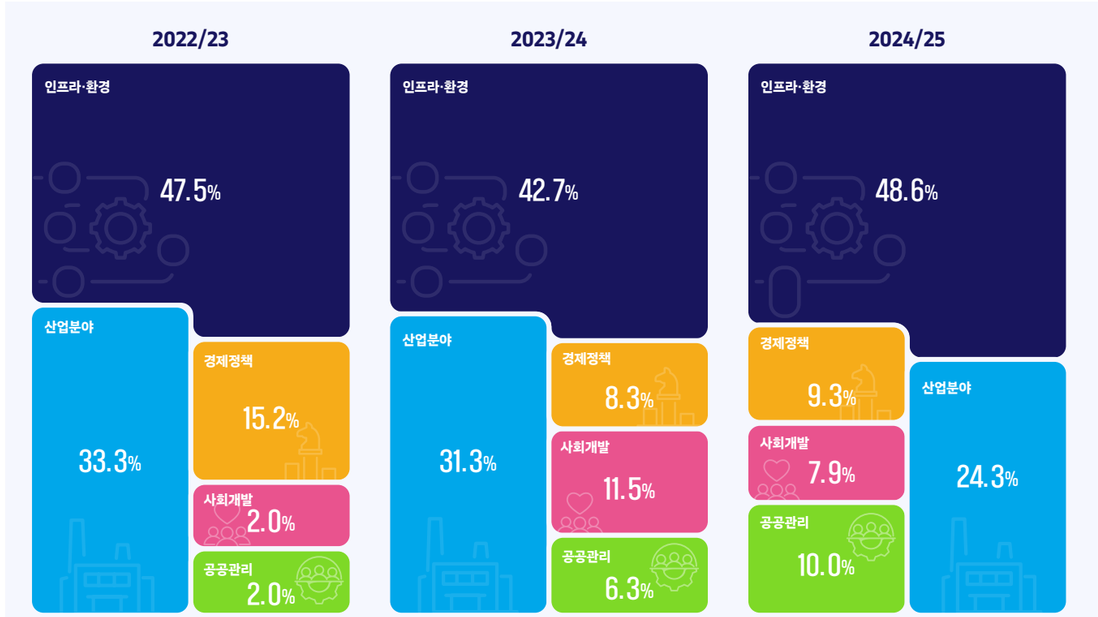
지역별 협력국 및 프로젝트 현황

● 국가 수 38개 ● 프로젝트 수 51개



최근 3년 분야별 자문 주제 현황

(2022/23년~2024/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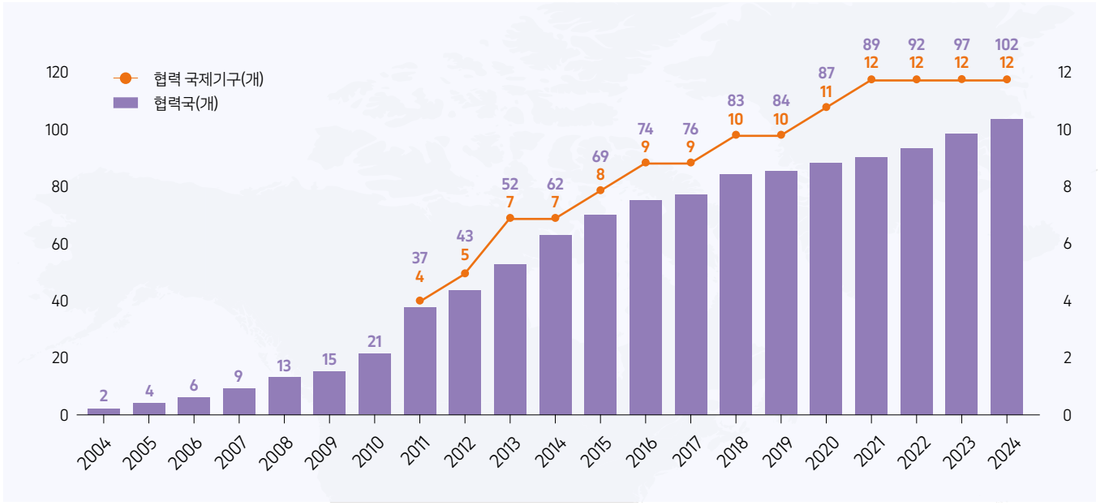
2024/25 분야별 자문주제 현황

인프라·환경	산업분야	사회개발	경제정책	공공관리
68개	34개	11개	13개	14개
국토교통(36개)	기업정책(12개)	농수산농촌(6개)	거시금융(12개)	행정(14개)
에너지(15개)	산업정책(10개)	인적자원(4개)	경제개발계획(1개)	
환경(9개)	과학기술(10개)	사회복지(1개)		
수자원위생(8개)	무역(2개)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4/25년까지 102개 협력국, 12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협력국 및 국제기구 변화 추이
(2004년~2024/25년)



국제기구 파트너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무역센터(ITC)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동남아프리카무역개발은행(TDB)
- 미주개발은행(IDB)
- 세계은행(WBG)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유엔 아태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UN-APCICT)
- 중남미개발은행(CAF)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중앙아시아 — 26개국

- 러시아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몰도바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비셰그라드그룹(V4)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신규)**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영국(신규)**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체코
- 카자흐스탄
- 크로아티아
- 키르기즈공화국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
- 헝가리
- 폴란드

중동·북아프리카 — 13개국

- 리비아
- 모로코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아시아·오세아니아 — 21개국

- 네팔
- 동티모르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메콩강위원회(MRC)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스리랑카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 파키스탄
- 필리핀
- 호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20개국

- 가나
- 가봉
- **기니(신규)**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신규)**
- 모잠비크민주공화국
- 세네갈
-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PASET)
- 앙골라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적도기니
- 케냐
- **코트디부아르(신규)**
- 콩고
- 탄자니아
- 토고

중남미 — 22개국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2. 2024/25 KSP 동향

- KSP의 변화: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창출로
- 2024/25 KSP 사업

KSP의 변화: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창출로



2004년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수행해 온 KSP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협력 방식과 역할을 확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새로운 정책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KSP는 기존의 개발 경험 공유 중심의 협력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혁신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정책 경험의 공유만으로는 협력 국가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KSP는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해법과 새로운 지식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정보의 축적 자체보다 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업과 상호 학습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도출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기존의 정형화된 정책 경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유연한 협력과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술 규범(norm)과 가치 체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향후 글로벌 협력의 방향성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KSP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협력 국가의 맥락과 수요를 반영한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지식을 창출하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정책자문을 넘어 제도 설계, 실행 전략, 후속 사업 발굴로 이어지는 보다 **실천적인 지식 협력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며,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술 수준이 높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들과의 협력은 단순한 지원 관계를 넘어 **상호 학습과 공동 혁신을 지향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KSP가 글로벌 지식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와는 수소 산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정책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영국과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5/26년 사업에서는 스웨덴과 전력반도체 분야 협력, 이탈리아와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협력을 진행하는 등, 신기술 기반의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KSP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과의 협력과 ODA 사업을 병행하며 축적된 경험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의 국가들을 연결하고 지식의 흐름을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KSP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혁신적 정책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요와 현장 경험을 다시 선진국과의 협력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학습 및 성과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KSP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책 해법의 형성과 확산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은 KSP가 지식 "공유" 중심의 사업에서 **지식 "공동 창출과 확산" 중심의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KSP는 글로벌 지식 협력 생태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오스 금융시스템 혁신 지원

#금융 부문 발전(Financial Sector Development) #금융 안정성 및 규제(Financial Stability & Regulation)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디지털 결제 시스템(Digital Payment Systems)



- **협력부처** 라오스 중앙은행 (Bank of the Lao PDR)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Korea Institute of Finance, KIF)
- **세부주제**
  1. 비은행 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체계 점검과 개선 방안
  2. 채권시장 규제 체계와 발전 전략
  3. 지급(결제) 시스템과 규제 개선 방향

사업 배경 및 목표

◦ 라오스는 최저개발국(LDC) 졸업 및 중진국 진입을 도모 중이나, 고환율·고물가·높은 대외 부채의 '3고 현상'에 직면하고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반 결제시장 관련 법제도 및 전문성 부족으로 금융시스템 혁신이 절실
◦ 라오스 중앙은행은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채권시장 활성화, 예금수취 마이크로파이낸스(DTMFIs) 규제 및 감독 체계 개선 등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자문 요청
◦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금융제도 개혁,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 경험을 공유하여 라오스의 금융 인프라 법제도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양국 간 금융 협력 확대 목적

자문 내용

라오스의 예금수취 마이크로파이낸스*(DTMFIs)* 규제 및 감독 체계, 채권시장 규제 체계, 지급*(결제)* 시스템 및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의 금융 개혁 및 시장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체계 개선, 인프라 개선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DTMFIs는 은행 및 사금융과의 경쟁 심화, 영세한 규모와 수익성 악화, 규제 부담 및 고객의 낮은 금융 이해도로 성장에 한계
◦ 채권시장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느슨한 지급준비율 제도로 인한 은행의 능동적 채권 거래 유인의 부족으로 유통시장 거래가 현저히 저조하며 지급결제시장은 디지털 결제 확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융 포용성, 사이버 보안 및 핀테크 규제 체계 미흡에 직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리스크 관리 부재로 부실화를 겪었으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통해 건전성 회복 유도
◦ 국채시장은 국채 전문딜러(PD) 제도 도입 및 장내거래 의무화를 통해 유통시장 유동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을 활성화
◦ 동남아 주요국 및 한국은 정부 주도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국가 결제 스위칭 도입,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과 시스템 안정성 간 균형 달성

정책 제언

◦ DTMFIs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라오스신용정보회사(LCIC) 가입 의무화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향후 부실 금융회사 발생에 대비한 시장 기반의 구조조정 수단 확보 및 예금자보호제도 의무 가입 추진
◦ 채권 보유 유인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의 상향 조정 및 국채 전문딜러(PD)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조성 의무와 혜택 부여
◦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설계 및 국경 간 담보협정(CBCAs) 체결을 통한 국채의 담보 효용가치 제고. 결제시장 현대화를 위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국가 결제 스위칭 참여 의무화, 오픈뱅킹 및 금융 ID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충

성과 및 시사점

◦ 비은행 금융기관, 채권, 지급결제 부문에 걸친 라오스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이행 로드맵 제공
◦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라오스의 「10년 자본시장 전략」 초안에 반영하였으며, 「2026-2030년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5개년 전략」에 반영할 계획
◦ 현재 대통령령(Decree) 수준인 DTMFI 관련 규제를 정식 법률로 제정 시 활용할 근거 자료 확보
◦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한국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의 라오스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자원 보호(Water Resources Protection)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환경 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 **협력부처**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큐아이브이
- **세부주제**
  1. 제반 현황 분석 및 후속 사업 타당성 조사
  2. 하수처리인프라 현황 및 수요분석
  3. 상하수도 개선방안 및 우선순위 도출
  4. 연계 사업 발굴 및 연구관리

사업 배경 및 목표

◦ 라오스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로 하수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시스템 부재로 처리 용량이 실제 수요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메콩강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심화
◦ 비엔티안의 경우 빗물과 생활하수가 개방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로 인해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 반복
◦ 한국의 하수처리 시스템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비엔티안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충, 관거 정비, 운영제도 개선을 포함한 통합 물관리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비엔티안의 하수도 및 도시 배수 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집중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도시홍수 방재 저류시설 확충, 재정 자립 및 거버넌스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 실행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비엔티안은 개별 정화조와 일부 분산형 처리시설(DEWATS)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 부하 관리에 구조적 한계 노출
◦ 물 관리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연계가 부족하고, 재원 부족 및 유지보수 예산 한계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지연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하수도법 제정을 통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고, 독립채산제와 점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하수도 운영의 완전한 재정 자립을 달성하였으며, 안양새물공원 사례처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달성

정책 제언

◦ 단기적으로 상습 침수 구역의 개방형 배수로 기능 개선 및 소규모 저류시설(왓타이 공항 인근 등) 시범 도입 우선 추진
◦ 장기적인 비엔티안 통합 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흩어진 규정을 통합할 하수도법 제정 권고
◦ 핵심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00,000㎥/일 규모의 중앙집중식 하수처리장 건립과 하수관거망의 단계적 확충
◦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점진적 인상 로드맵 마련 및 공공사업교통부 중심의 범부처 정책 협의체 신설

성과 및 시사점

◦ 비엔티안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통합 로드맵 및 구체적인 총사업비(약 2.9억 달러) 산출 내역 제공
◦ 공공사업교통부 차관 등 정책실무자 대상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물재생센터 및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시찰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선진 기술의 도입 동력을 창출
◦ 자체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해 라오스 국립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지 수자원 전문가 육성 시스템 설계 기반 확립
◦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연계한 대규모 ODA 인프라 투자 사업 추진 토대 마련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운영체계 개선사업 (2차)

항공 운송(Air Transport) # 인적 자원 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안전 규제(Safety Regulation)



- **협력부처**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민간항공국(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DCAL)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국항공대학교
- **세부주제**
  1. 라오스 항공운영체계 현황 분석
  2. 항공안전감독관 제도 성장 로드맵
  3. 정책 제언
  4. MOU 기반 연계사업
  5. 항공안전감독관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 개발

사업 배경 및 목표

◦ 라오스는 관광산업 주력화를 위해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등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ICAO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 훈련 시스템 부재
◦ 과거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감독관의 역량 및 지침 미비가 주요 결함으로 지적되어 국가항공안전감독체계(SSO) 강화 절실
◦ 한국의 항공안전감독 및 USOAP 수검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자립형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목적

자문 내용

라오스 민간항공국(DCAL)의 역량을 진단하고, 멀티-롤(Multi-role) 감독관 도입, 단계별 성장 로드맵 및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포괄하는 역량 강화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라오스 민간항공국 내 전문 감독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및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 감독 수행에 구조적 한계 노출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감독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가올 USOAP 평가에 대비해 데이터 기반의 안전 성과 관리 체계 확립 성공

정책 제언

◦ 즉각적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1인의 감독관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롤(Multi-role) 모델의 단기 도입 권고
◦ 감독관 제도를 3단계(도입기, 안정기, 성숙기)로 구분한 장기 성장 로드맵 이행
◦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적정 감독관 인력 산정 모델 적용
◦ 해외 위탁 교육과 자체 교관 양성(Train-the-Trainer)을 결합한 자립형 훈련 체계 확립

성과 및 시사점

◦ 항공보안, 공항안전, 항공운항, 항행안전 등 4대 분야의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감독관 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성공적 제공
◦ 라오스 민간항공국과 한국항공대학교 간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성사시켜 중장기적 전문인력 양성 협력의 제도적 기반 확립
◦ 루앙프라방 국제공항의 안전 운영 수준을 제고하여 향후 국제노선 확대 및 지역 허브 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신뢰성 확보
◦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기(Zero Time to Airline) 교육체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 항공 산업의 자립성 향상 청사진 제시
◦ 다가오는 ICAO USOAP 감사에 대비한 실질적 이행 지침을 전수하여 라오스 항공 당국의 국제적 규제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

말레이시아 전력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실증

#에너지 송배전(Energy Transmission & Distribu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말레이시아 사바전력청(Sabah Electricity SDN BHD)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안전공사
- **세부주제**
  1. 말레이시아 변전소 운영 현황 분석
  2. 말레이시아 275kV 변전소 AMS 기반 기술의 현장 실증
  3. 자산관리 시스템 활용 방안(AMS)
  4. 말레이시아 전기설비 안전관리체계 고찰
  5. 말레이시아 변전소 통합자산관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 제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말레이시아 사바주는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송배전 설비의 심각한 노후화 및 수동 유지보수에 의존하여 잦은 정전과 전력 공급 불안정성 직면
◦ 기존 시간 기반 정비(TBM)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최적의 유지보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능형 관리 체계 확립 절실
◦ 한국의 선진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시스템(AMS)과 전기안전 검사체계를 현지에 실증하여, 사바주 전력망의 신뢰도 제고 및 예방진단 중심의 통합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사바전력청의 변전소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변전소 대상 자산관리시스템(AMS) 실증, 디지털 검사체계 도입 및 통합 자산관리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사바주 전력망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단일 송전계통 중심이며, SCADA가 도입되었으나 단순 감시 위주로 운영 중임. 설비 열화가 심각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고장 발생 시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 노출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한국전력 주도로 전국 변전소에 SCADA, 배전자동화(DAS), 자산관리시스템(AMS)을 통합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예지보전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일반용 전기설비 대상 원격 감시 및 비대면 무정전 온라인 검사 제도 확립

정책 제언

◦ 현장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 특성을 반영한 AI 예지보전 수명 모델 커스터마이징 권고
◦ 센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제어를 단일 플랫폼(ARMOUR+)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단계적 확산
◦ 기존 수작업을 대체할 디지털 시스템 검사 기준의 법제화 및 사바전력청 내 자산관리 전담 조직 신설
◦ 실시간 리스크(PoF/CoF) 산출을 통한 예산 최적화 및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 전략으로의 전면 전환

성과 및 시사점

◦ 라하드다투 Dam Road 변전소에 국내 중전기기 업계 최초로 AI 자산관리 솔루션을 실제 설치 및 시운전하여 해외 진출의 성공적 실증 사례 창출
◦ 사바전력청 실무진 대상 현지 기술 교육을 통해 예방 진단 설비 운용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디지털 시스템 검사를 위한 공식적인 법적·제도적 기준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여 말레이시아 국가 전기안전 수준 향상 기여
◦ 본 실증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바주 전역의 지능형 자산관리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대규모 후속 연계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

몽골 중공업 발전 전략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중공업 발전(Heavy Industry Development)
#투자 유치(Investment Attraction) #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 **협력부처** 몽골 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KISME)
- **세부주제**
  1. 중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중심 개발 전략
  2. 중공업 투자유치 방안
  3. 중공업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사업 배경 및 목표

◦ 몽골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이 광물성 생산품인 자원 의존형 경제로, 저부가가치 원자재 수출 구조 탈피 및 경제 다각화 시급
◦ 제조업 육성을 위해 '비전 2050' 및 14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철소, 제련소, 석탄화학공장 등 중공업 발전 적극 추진 중
◦ 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몽골에 적합한 중공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전략, 인력 양성 등 실행 가능한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철강, 구리, 석탄)을 활용한 핵심 중공업 발전 전략, 재원 조달 및 투자 유치 방안, 산업인력 양성 등 종합적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물류 인프라 취약(단선 철도, 중국 의존형 경로), 법·제도적 일관성 부족에 따른 거버넌스 리스크,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및 전문 기술 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직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197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특정 핵심 산업(철강, 조선 등)을 선정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해외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중화학공업 고도화 성공

정책 제언

◦ 구리 제련소, 제철소 등 소수 핵심 앵커 플랜트 우선 구축 및 단계적 규모 확장
◦ 중국(내몽골) 및 러시아를 경유하는 물류 루트의 다변화와 국경 내륙 물류항 개발
◦ 자산기반금융(ABF) 및 다자개발은행(MDBs)을 활용한 혁신적 투자 자본 유치
◦ 중공업 발전 기본법 등 법적 기반 확립 및 기술 이전 의무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통한 숙련 인력 양성

성과 및 시사점

◦ 투입-산출(I-O) 모델 분석을 통해 중공업 투자가 몽골 경제에 미칠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정량적 입증
◦ 한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요와 몽골의 산업 발전 수요를 연계하는 한국-몽골 상호 호혜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의 초석 마련
◦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보장 등 구체적 거버넌스 혁신 가이드라인 제공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법 체계 수립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도시 교통(Urban Transport) #법제도 프레임워크 (Legal Frameworks)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표준 및 인증(Standards and Certification)



- **협력부처**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관리위원회(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케이알인터네셔널(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부주제**
  1. 베트남(호치민) 도시철도 관련 국가 기술규정 체계화를 위한 정책제언
  2. 베트남(호치민)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 유치 전략 제시
  3. 베트남(호치민) 도시철도의 이해관계자 역할 지침 제시

사업 배경 및 목표

-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510km로 확대하는 계획안 승인 등 철도 시스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나 기술기준 미비로 시행 한계 노출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신속한 네트워크 확대 곤란
-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 규정 체계화,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 마련 방안, 이해관계자 역할 지침 등의 경험을 공유하여 호치민시 맞춤형 정책 도출 목적

자문 내용

호치민시 도시철도 건설에 적용할 기술기준 및 규정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기준 정비, 투자 재원 다각화,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 제시

현황 분석

- 호치민시 1호선은 기술기준 부재와 규제·감독 기능의 모호함으로 인해 개통까지 10년 이상 지연이 초래되었으며, 총괄 컨설턴트가 설계와 감리를 장기간 겸임하여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고 승인 및 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도시철도법을 통해 건설, 안전, 운영의 정량적 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관된 품질 확보에 성공,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명문화하고 BTO, BTL 등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 재원 다변화를 달성하였으며 사업 단계별로 설계-감리 분리 발주 및 현장 분쟁판정위원회(DAB) 운영을 통해 공정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

정책 제언

-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도시철도 생애주기에 맞춘 국가 기술 규정의 조속한 제정 및 체계화 권고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비율 법제화 및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연계 민관협력(PPP) 사업 적극 도입
- 각 과업에 실행·최종책임·협의·통보(RACI) 매트릭스를 부여하여 기관 간 명확한 책임선 고정
- 설계와 감리의 분리 발주 원칙화 및 문서관리 단일창구(CDE)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 추적성 확보
- 원활한 시운전 및 면허 취득을 위해 개통 36개월 전 운영 주체의 조기 설립 및 참여 의무화

성과 및 시사점

- 호치민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에 즉각 적용 가능한 단계별 권한 재설계 및 절차 표준화 로드맵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철도교통관제센터 및 시공 현장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선진 시스템 도입 실행 동력 확보
- 도시철도 관련 절차 개선, 문서 처리 기한 규정 마련, PPP 적용 가능성 검토 등 협력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높은 정책 수용성 도출
- 단순한 건설 자문을 넘어 법제도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한국 철도 기업의 베트남 교통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확립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설립

#도시 교통(Urban Transport) #직업 교육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운영 및 유지보수(Operations and Maintenance) #교육 시설(Educational Facilities)



- **협력부처** 호치민시 도시철도공사1(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s No.1 Company Limited, HURC1)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한국철도공사, 케이알인터네셔널(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부주제**
  1.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HURC1 역할 및 기능 조사, 분석
  2.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교육 시스템 및 교수요원 역량강화
  3.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전략 및 입지 선정 분석
  4.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제언

사업 배경 및 목표

- 호치민시는 2045년까지 510km 규모로 도시철도망을 확장할 계획이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인력 대규모 양성이 필수
- 그러나 도시철도 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운영적 기반이 미비하고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
- 50년 이상 축적된 한국의 도시철도 교육훈련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호치민시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환경 및 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도출

자문 내용

HURC1의 조직, 인력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철도 인재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기반 교육과정 설계, 시스템 연계형 학사관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전략을 포괄하는 훈련센터 설립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HURC1은 현재 독립된 교육훈련 전담 부서 없이 총무부서에서 직무 교육(OJT)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습을 위한 교육 기자재 부족, 표준화된 직무 훈련 모델의 부재로 향후 노선 확장에 대비한 전문 유지관리 인력 양성이 불가능
- 여러 부서에 분산된 교육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훈련센터 운영 재원 확보에 제약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철도공사(KORAIL)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인적 오류를 방지하는 고도화된 전 기능 모의운전연습기(FTS) 및 직무별 법정 의무 교육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 현장 순환근무제를 포함한 엄격한 교수요원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품질을 유지하며 인사·안전 데이터가 통합된 차세대 학사운영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 중

정책 제언

- HURC1 내에 교육 운영을 총괄할 전담 부서(훈련센터 운영과) 신설 권고 및 운전, 관제, 차량정비 등 핵심 직무에 대한 표준화된 훈련 커리큘럼 및 필수 실습 장비 목록 도출
- 강사 자격 기준 제도화, 주기적인 보수교육 체계 도입 및 교육 기획-실행-성과 관리를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통합 학사운영관리시스템(LMS) 및 이러닝 플랫폼 구축 제언
- 초기 ODA 자금과 중장기 시(市) 예산 및 자체 수익을 결합한 혼합형 재원 조달 로드맵 수립

성과 및 시사점

- 훈련센터 건립 논의를 체계적인 교육 수요 추정과 구체적인 조직·예산 모델로 가시화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정책적 공감대를 확고히 형성
- 향후 HURC1 내 훈련센터 운영 전담 부서 신설이 내부적으로 승인될 시, 실질적인 성과 달성 가능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 철도 인재개발원 및 첨단 실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지 관계자들의 디지털 훈련 시스템 도입 의지 제고
-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훈련센터 타당성 조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수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한-베 철도 협력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 마련

인도네시아 녹색투자 이행전략 수립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 & Planning)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녹색 투자(Green Investment)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 **협력부처**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녹색투자 이행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 방안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수단, 투자자 참여 및 인센티브 확대
  3.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배경 및 목표

◦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중립 및 녹색 경제 성장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중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제도 정합성 부족, 재정 제약 및 높은 투자 위험성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
◦ 한국의 성공적인 녹색 전환 및 기후금융 경험을 공유하여 인도네시아 실정에 맞는 녹색투자 규제 환경 개선 및 재원 조달 전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인도네시아의 녹색투자 규제 체계와 리스크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기후 정책 및 금융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통합적 이행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복잡한 전력망 사용료 및 화석연료 보조금 지속 등으로 민간 투자가 저조하며, 국영기업 중심의 정책 집행 구조로 인해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 및 통합된 규제 거버넌스 미흡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녹색 성장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립
◦ 한국전력공사(KEPCO) 주도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배출권거래제(ETS), 기후환경요금 도입 및 민관협력(PPP) 등을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및 재원 조달 체계 구축 달성

정책 제언

◦ 국가녹색전환위원회(National Green Transition Council) 신설 등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합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혼합금융 확대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LCS)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도입을 통한 노동자·지역사회 보호
◦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을 투자 타당성 평가에 내재화하여 녹색투자의 경제적 편익 명확화

성과 및 시사점

◦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규제 개선 및 에너지전환플랫폼(ETP) 운영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공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인프라 시찰로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도출된 정책제언은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제63호' 개정 등 국가 핵심 제도 개선 과정의 기초 설계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양국 간 녹색 금융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협력 기반 확립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이행 평가방법론 강화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 **협력부처**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Finance and Development Supervisory Agency, BPKP)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평가 메커니즘 연구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 비교 연구: OECD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및 정책적 시사점
  3. 국영기업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사업 배경 및 목표

◦ 인도네시아는 국영기업이 국가경제와 전략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축인 만큼,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실질적 경영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GCG 평가체계 고도화가 필요
◦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법·제도, 평가 거버넌스 및 환류 체계 운영 경험과 OEC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GCG 평가체계와 방법론을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관리 기반 마련
◦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에 맞는 객관적인 GCG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안과 단계별 이행 전략(액션플랜)을 제공하여 국영기업의 책임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목적

자문 내용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현행 GCG 평가체계와 제도를 진단하고, 한국의 경영평가 제도 및 OECD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GCG 평가체계는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평가 주기·절차·사후 조치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한계로 작용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재정경제부 중심의 통합적 경영평가 체계 아래 거버넌스·성과·내부통제를 연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및 인센티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또한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을 평가 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

정책 제언

◦ 인도네시아는 범부처 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GCG 평가의 단일 법적 기반 마련, 평가구조 및 절차 재설계, 외부평가 및 인터뷰·현장 확인 도입, 평가 결과 공개와 인센티브·제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성과 및 시사점

◦ 본 사업은 SK-16/SMBU/2012 폐지 이후 새로운 GCG 평가체계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수행되어, BPKP·국영기업부·재무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 개편 논의에 실질적인 참고 기반을 제공
◦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성과 중심 평가모델, 피드백·인센티브 체계, ESG·윤리 리더십 강화, 맞춤형 지표 설계 등 실행 지향적 정책 대안을 제시
◦ 현지 관계기관의 제도 이해도와 정책역량이 제고되었고, 성과중심 GCG 평가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국영기업부·재무부·BPKP를 중심으로 후속 제도화 논의도 구체화
◦ 본 사업은 단순 제도 비교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행정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실행형 지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OECD 가입 대응 및 공공 부문 거버넌스 분야 후속 협력사업 발굴로 연계될 수 있다는 시사점 보유

캄보디아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공사 운영 개선 방안

#금융 부문 발전(Financial Sector Development)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신용보증(Credit Guarantee)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협력부처**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Cambodia, CGCC)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KODIT), 영남대학교
- **세부주제**
  1. 신용보증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신용분석역량 제고 방안
  2.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 리스크 관리 체계 분석 및 강화 방안
  3. 캄보디아 중소기업 성장과 발전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사업 배경 및 목표

◦ 캄보디아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신용보증공사(CGCC)를 설립하였으나, 초기 단계로서 자체 신용평가모형 및 체계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재
◦ 50년간 공적 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해 온 한국 신용보증기금(KODIT)의 신용조사, 리스크 관리, 재원조달 노하우 공유
◦ CGCC의 신용분석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캄보디아 중소기업의 금융 포용성 확대 목적

자문 내용

캄보디아 신용보증 운영 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리스크 통제, 재원 조달을 아우르는 종합 개선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현재 참여금융기관(PFI)에 의존하는 간접보증을 주로 운영 중이며 자체적인 공식 신용평가 모형은 부재하고 수작업 위주의 데이터 관리로 신용위험 예측에 한계 직면 및 보증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 신용보증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기업 신용정보를 독자적으로 축적하고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KRS)을 확립, 정부 및 금융기관의 법정 의무 출연 제도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외부 신용정보(KCIS)를 결합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에 성공

정책 제언

◦ 보증 신청 기업 평가를 위한 자체 스코어링 시스템(Scorecard) 및 최소 통과 기준 도입
◦ 참여 금융기관 및 캄보디아신용정보원(CBC)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중앙집중형 신용정보망 구축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의무 출연 제도화로 보증 재원 확충
◦ 리스크 기반의 차등화된 보증요율 체계 설계 및 대체 데이터 활용 등 금융상품 다변화

성과 및 시사점

◦ 담보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단기, 중장기) 리스크 관리 및 신용보증체계 고도화 로드맵 제공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신용보증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캄보디아 정책결정자들의 자체 평가모형 구축 실행 동력 확보
◦ 도출된 정책제언은 CGCC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편 및 캄보디아 경제재무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재정비 논의에 핵심 자료로 반영 예정
◦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캄보디아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장기 협력 기반 확립

태국 데이터기반, 시민중심 혁신을 통한 선진스마트시티 구축-나콘시탐마랏 사례

#스마트시티 개발(Smart City Development)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시민 참여(Citizen Engagement)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 **협력부처**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DEPA)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엘지씨엔에스, ㈜아라드네트웍스, (사)스마트도시협회
- **세부주제**
  1. 나콘시탐마랏 맞춤형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 개선안
  2.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기상관제센터-도로관제센터 통합 연계 시스템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3. 스마트 인프라 실용성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 유치를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심층 분석

사업 배경 및 목표

◦ 태국 정부는 '태국 4.0' 정책을 통해 혁신 기반의 고도화된 경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조성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적극 추진
◦ 태국 남부의 행정 중심지인 나콘시탐마랏(NST)은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며 통합적 관제 시스템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및 민관협력(PPP)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NST 맞춤형 중장기 로드맵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투자 모델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나콘시탐마랏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 기반 통합 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E-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PPP) 모델 제시

현황 분석

◦ NST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중앙 통합 플랫폼 없이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존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전통적 PPP 제도 NST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정 여건과 불일치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단순 CCTV 관제에서 데이터 허브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재난 및 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정책 제언

◦ 우선순위에 따른 로드맵 재정렬을 통해 통합 도시 모니터링 시스템, E-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5G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
◦ 기상-교통 통합관제플랫폼의 단계적 도입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한 CCTV 인프라 보안 강화
◦ 대규모 BOT 모델 대신 합작법인(JV) 또는 서비스 지향형 PPP 모델 적용 및 소규모 개념증명(PoC)을 통한 단계별 민간 투자 유치 환경 조성

성과 및 시사점

◦ 단편적 서비스 위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선진 모델로 고도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이행 로드맵 제공
◦ 네트워크 보안 및 관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한국 기술 기반의 실증 사업(PoC) 추진 기반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타진
◦ 고위정책대화 및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스마트시티 인프라(서울 TOPIS,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를 방문하며 태국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맞춤형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향후 한국 IT 기업의 태국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토대 마련

필리핀 청정·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 Energy Generation)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재)에너지경제연구원(KEEI)
- **세부주제**
  1. 필리핀 에너지 믹스 및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
  2. 청정에너지 글로벌 동향 분석
  3. 원자력 에너지 도입 기반
  4. 필리핀의 성공적 원자력 도입을 위한 역량 구축
  5.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전략

사업 배경 및 목표

◦ 필리핀은 전력수요 급증과 가스전 고갈 등으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력 요금과 계통 불안정성 직면
◦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리핀 에너지계획 2023-2050」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50%) 및 2032년 상업용 원전 도입 추진
◦ 한국의 성공적인 원전 운영·규제 경험과 청정에너지 발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필리핀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원자력 복합 에너지 전환 전략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목적

자문 내용

필리핀의 에너지 믹스 및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확대, 독립적 원자력 규제 체계 확립, 인력 양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화석연료 편중 및 분절된 도서 전력망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한계가 존재
◦ 원자력 도입을 위한 국가적 의지(EO 164)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진흥 기능이 혼재되어 독립적 규제기관이 부재하며, 산업 생태계 및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과거 바탄 원전(BNPP) 가동 중단 사례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조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지속적인 인력 양성과 기술 자립을 거쳐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였으며,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를 설립하여 규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정착시키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계통 안정성 달성 성공

정책 제언

◦ 규제와 진흥을 완전히 분리한 필리핀 원자력규제청(PhilATOM) 조속 설립 및 위험·성과 기반 규제(RIPB) 모델 도입 권고
◦ 필리핀 전력망 특성을 고려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시범사업 검토 및 수상태양광·해상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확대
◦ 연구용 원자로(PRR-1 SATER)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 핵심 규제·운영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이익 공유제도 법제화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성과 및 시사점

◦ 필리핀의 원자력 법안(PhilATOM Bill) 통과 시점과 맞물려, 즉각 활용 가능한 독립 규제기관 설계 및 단계별 라이선싱 절차 구체적 제공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원전 시설(새울원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창출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병행하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여 포괄적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토대 마련
◦ 향후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R)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교두보 확립

GGGI 공동컨설팅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배터리 재활용(Battery Recycling) #사용후 배터리(Used Battery)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협력부처**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컨소시엄(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현대경제연구원, (재)제주테크노파크)
- **세부주제**
  1.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 및 규정 현황 분석·진단
  2.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 모범 사례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사례 연구
  3. 인도네시아의 효과적인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정책 제언

사업 배경 및 목표

◦ 인도네시아는 국가 에너지 일반 계획(NEP)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전기차 보급을 급격히 확대 중이나, 향후 급증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비한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인프라 절대적 부족
◦ 2026년 교통 관련 법령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선진적인 배터리 전주기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인도네시아 실정에 맞는 배터리 재활용 정책, 규제 프레임워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인도네시아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 재활용 인프라 확충을 아우르는 단계별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사용후 배터리는 B3지정폐기물로 분류되나 명확한 회수 책임 주체 및 이력 추적 시스템이 부재하고 수거 및 보관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하며, 금속 추출 등 고도화된 재활용 기술 및 안전 해체 설비 부족에 따라 환경 오염 및 사고 위험이 상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전 과정의 투명한 디지털 이력 관리 확립 및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공 주도의 수거·검사·재사용 통합 거점 인프라의 성공적 운영
◦ EU는 배터리 패스포트 및 EPR 제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순환 경제 선도

정책 제언

◦ 단기적으로 국가개발기획부 및 환경부 중심의 공공 수거 시범사업 실시와 배터리 등록·이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 중기적으로 EPR 제도 법제화 및 재활용 기술(블랙매스 생산 등) 시범 적용. 장기적으로 국가표준(SNI) 기반의 민간 주도 인증 체계 확립 및 자생적 순환 생태계 조성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기 단계의 '사용후 배터리 수거센터'와 전처리 단계의 '블랙매스 생산 시설' 파일럿 프로젝트 우선 추진 권고

성과 및 시사점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가 추진 중인 2026년 전기차 관련 법안 개정 과정에 본 KSP 사업의 정책 제언을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의지 표명
◦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선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합작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및 실행 기반 구축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한국의 신탁기금 등 본 사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사업 실시 기반 마련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수립

#교통(Transport),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법제도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테스트베드(Testbed)



- **협력부처** 세르비아 국무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세르비아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
  2.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전략
  3.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프레임워크 분석

사업 배경 및 목표

◦ 세르비아는 EU 가입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을 AI 분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상용화와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
◦ 본 사업은 세르비아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법·제도 기반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EU 가입 준비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및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 교통인프라 준비 수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한-세르비아 협력 확대에 기여

자문 내용

세르비아의 도로 인프라 및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운용 경험과 법제도 수립 사례를 바탕으로 엑스포 연계 시범운행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세르비아는 2027년 베오그라드 엑스포를 계기로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안전·도로인프라·통신망·운영체계 측면의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현행 법·제도 또한 테스트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제 시범운행과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은 미흡한 상황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내 센서·AI·통신기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개방형 테스트베드, 규제특례, 외부 인프라 연계, 국제 기준 기반의 인증·안전규제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과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

정책 제언

◦ 개방형 테스트베드와 단계적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2027년 엑스포 시범운행을 준비하되, 샌드박스 도입, 형식승인·보험·데이터·사이버보안 제도 정비, 5G·V2X·관제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원스톱 거버넌스 및 인력양성을 병행하여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성과 및 시사점

◦ 세르비아의 인프라·교통체계·제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상용화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2027 베오그라드 EXPO 연계 로드맵을 제시
◦ 테스트베드 3개 시나리오와 항목별 소요비용, 예산 부담 방향,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제도 정비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
◦ 한국의 자율주행 제도와 시스템을 EU·독일 기준과 연계하여 세르비아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세르비아의 EU 가입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

스페인 바스크주 P5G 도입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 **협력부처** 바스크 무역투자청(Basque Trade and Investment)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엔씨엘, SK오앤에스㈜
- **세부주제**
  1. 바스크주 이해관계자의 P5G 도입 수요 및 현황 조사
  2. 기존 5G네크워크와 P5G 관련 정책 As-is 분석 및 연구
  3. 선진사례 기반의 P5G 네크워크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4. P5G 기술 도입 사례 조사 및 PoC(실증연구) 등 후속프로젝트 연계 가능성 조사

사업 배경 및 목표

◦ 스페인 바스크주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고도화된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정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P5G(5G 특화망) 도입 필요성 증대
◦ 스페인 중앙정부의 5G 정책이 존재하나, 바스크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P5G 주파수 할당, 보안 정책 및 실질적인 산업 적용 마스터플랜 부재
◦ 한국의 선도적인 5G 상용화 및 산업 특화망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크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P5G 도입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바스크주의 P5G 도입 수요 및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주파수 정책 개선, 민관 협력 투자 모델, 맞춤형 산업 실증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바스크 제조 기업들은 자동화 및 엣지 컴퓨팅을 위해 초저지연 통신망(P5G) 수요가 높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 및 유연한 주파수 접근성 제한 등 제도적 한계 직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독일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분권적 '로컬 5G'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하여 산업 내 P5G를 빠르게 확산하는 데 성공
◦ 한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과 민간 기업(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선도적 실증을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융합 생태계 및 보안 체계 확립

정책 제언

◦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식 로컬 5G 모델을 도입하고 산업용 26GHz 대역 주파수 개방
◦ 데이터 주권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연계된 P5G 전용 보안·인증 체계 구축
◦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 통신사 및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펀딩 모델 도입.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략 산업 중심의 단기 개념증명(PoC) 사업 우선 실행 및 대학과 연계한 P5G 전문 인력 양성

성과 및 시사점

◦ Murueta 조선소 등 현지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3D 전파 시뮬레이션 및 장비 구축 소요 예산을 직접 산출하여 바스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사업화 근거 제공
◦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실증 현장(철도기술연구원, 통신장비 제조사 등)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통신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바스크주의 2030 산업 디지털화 전략에 한국형 P5G 성공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 요소로 반영하기로 한 합의를 도출
◦ 단순 기술 자문을 넘어 한국 통신 장비·솔루션 기업의 스페인 수출 기회 발굴 및 EU 기금 연계 후속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 토대 마련

슬로바키아 혁신산업 발전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협력부처** 슬로바키아 경제부, 혁신에너지청(Slovak Innovation and Energy Agency, SIEA)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FDI-이후 전략 및 정책 제언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연계 정책 제언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 제언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린수소 산업 개발 전략

사업 배경 및 목표

◦ 슬로바키아는 수도를 제외한 지역의 혁신 및 연구개발(R&D) 역량 저하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중심 성장의 한계로 인해 극심한 지역 간 경제 격차 심화로 산업 및 지역 개발 전반에 혁신과 R&D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기반 경제 전환 및 포용적 균형발전 모색
◦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 발전,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균형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슬로바키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이행 역량 고도화 목적

자문 내용

슬로바키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FDI 이후 산업정책, 산학협력, 중소기업 디지털화,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구조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경제 활동의 서부 편중 및 혁신역량 부족에 따른 지역 격차 고착화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클라우드 등) 도입 부진 및 산학협력의 단기성·분절화 지속
◦ 친환경 수소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취약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본 축적 중심에서 지역균형 및 혁신 주도 성장으로 성공적 전환을 달성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한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선도적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정책 제언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 기반(Place-based) 클러스터 육성 및 지방정부 기획 역량 제고
◦ 인공지능 기반 산학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가족회사·리빙랩 모델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제도화
◦ 중소기업 디지털 진단-바우처 패키지 지원 및 대기업 주도 협력사 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
◦ 최고위급 수소위원회 신설 및 한국-슬로바키아 핵심부품 현지화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슬로바키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산업 혁신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 정책 실행 모델 제시
◦ 현지 실태조사 및 정책 실무자 연수를 통한 양국 간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정책 제언 사항을 향후 슬로바키아 국가 혁신 전략(RIS3 2027+) 문서 개정 시 적극 반영 검토 합의
◦ 수소 산업 등 녹색 전환 분야에서의 공동 기술 실증 및 후속 협력을 위한 양국 핵심 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 한국 혁신기업의 중부유럽 진출 및 EU 차원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 확립

영국 한-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디지털 표준(Digital Standard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ies) #반도체(Semiconductors)



- **협력부처**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SIT)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양국 간 표준화 협력을 위한 핵심·신흥기술 선정
  2. AI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3. 반도체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4. 양자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도출

사업 배경 및 목표

◦ 핵심·신흥기술(CET)에 대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 표준화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 2023년 한-영 정상 간 체결된 '다우닝가 합의' 및 '디지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I, 양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 필요성 증대
◦ 글로벌 표준화 기구(SDO) 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정책적 수준에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표준 협력 방안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3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양국의 표준화 정책 및 거버넌스를 비교·진단하고, 기술별 강점의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공동 리더십 확보 및 사전표준화(pre-standardization)-R&D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

현황 분석

◦ 한국과 영국은 AI, 반도체, 양자 분야에서 각각 제조·응용(한국)과 설계·기초연구 및 측정 인프라(영국)에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
◦ 양국 모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요 도입국(adopter)으로서, 모델 평가·안전성·추적가능성 등에 대한 국제 기준 정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양자 분야에서도 기술 초기 단계에서의 표준 선점을 위해 사전표준화 및 국제협력 강화가 요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정보통신협회(TTA)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며 ICT 및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계 중심의 표준화 역량을 축적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국표준협회(BSI), 국립물리연구소(NPL), AI 보안 연구소(AISI) 등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기반으로 AI 안전성, 반도체 메트롤로지, 양자 컴퓨팅 벤치마킹 등 신흥 기술 분야의 표준 논의를 선도. 특히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 JTC3 등)를 통해 협력 기반 기구축

정책 제언

◦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표준협력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정책-표준기관-산업-연구기관을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 ISO/IEC JTC1(AI), JTC3(양자) 등 국제표준기구 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추적가능성 및 양자·반도체 핵심 분야에서 공동 표준안 발의 추진
◦ 또한 영국 NPL-한국 KRISS 간 공동 시험·측정 협력을 확대하여 사전표준화(pre-standardization)와 R&D를 연계하고, 기술 간 융합 영역(AI-반도체, AI-양자 등)에 대한 공동 표준협력 의제를 발굴할 필요
◦ 아울러 산업계 참여 확대 및 표준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표준 거버넌스 참여를 지원하는 다자 협력도 병행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기존 개도국 대상 제도 자문 중심의 KSP 사업을, 선진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표준 및 거버넌스 규범을 공동 설계하는 협력 모델로 확장한 사례
◦ 양국 과학기술·표준·연구기관(DSIT, BSI, NPL, AISI 등) 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실무 협력을 통해 정책-표준기관-연구기관-산업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와 제도적 신뢰 기반을 구축
◦ AI, 반도체, 양자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사전표준화-R&D-국제표준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시험·표준안 발굴을 통해 양국 기업의 글로벌 표준 대응 및 시장 진입 기반 강화에 기여
◦ 향후 6G, AI-RAN 등 기술 간 융합 영역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실증·표준화를 연계하고,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장기적 표준 협력 프레임워크 및 전략적 표준 동맹 구축의 기반을 마련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를 위한 정책기술제언 (2차년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도시 개발 및 관리(Urban Development & Management) #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 Energy Generation)



- **협력부처** 우즈베키스탄 건설공공주택서비스부 (Ministry of Consultation,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 **세부주제**
  1. 폐기물 소각열 활용 열공급방안 제시
  2. 지역난방 통합운영센터 구축 기본계획
  3. 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계획 개선 방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난방 시스템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기 도입 이후 필수 보수 부족으로 시설의 60% 이상이 노후화되어 열손실 증가 및 공급 안정성 저하 문제 직면
◦ 최근 대통령령(PQ-100) 발효에 따라 신설 중앙공기업(열공급공사) 주도의 지역난방 전면 현대화, 대규모 신도시 구축, 폐기물 에너지화 등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전환 추진
◦ 한국의 성공적인 집단에너지 사업 운영 및 신도시 에너지 공급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시스템 및 폐기물 활용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소각열 연계, 통합운영센터 구축, 신도시 삼중발전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현대화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도시화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나 95% 이상을 단순 매립에 의존하여 환경 오염 심각. 전국 열생산시설에 데이터 수집 인프라 부재로 지능형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며, 뉴타슈켄트 신도시는 과거 방식인 고온 증기 기반 열공급으로 설계되어 리스크 상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공공 소각시설의 소각열 회수율 73%를 달성하며 이를 지역난방 열원으로 판매하여 직매립 제로화 달성에 성공.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 19개 사업소의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운영센터'의 AI 기반 예측 제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 달성

정책 제언

◦ 신규 소각발전 시설을 열병합발전(CHP) 방식으로 전환 설계하여 소각열을 지역난방 기저 열원으로 선제적 활용할 것을 권고
◦ 데이터 수집, 자동화 통신망 확충, AI 지능형 예측 도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합운영센터 구축 로드맵 실행
◦ 뉴타슈켄트 열공급을 고온 증기 방식(180°C)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온수(100°C) 방식으로 전면 전환
◦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분산형 열원 전략적 도입 및 사용자 측 2관식 통합배관 적용을 통한 건설비 절감 유도

성과 및 시사점

◦ 소각열의 지역난방 연계 시 설비 효율 향상 및 연간 74백만 달러 규모의 수익 창출, 5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여 정책 추진 당위성 확보
◦ 신설된 열공급공사 산하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단계별 필요 예산(약 4.6백만 달러)과 기술적 이행안을 도출하여 중앙통제 디지털화 토대 마련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지역난방 인프라 및 자원회수시설을 시찰하게 하여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시스템 도입 의지 고취
◦ 기술 세미나 및 구매 상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한국 민간 기업들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발주 수요를 직접 매칭하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
◦ 도출된 기술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자금과 연계한 친환경 후속 사업 타당성 기반 확립

우즈베키스탄 국가 생활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 **협력부처**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 (Ministry of Ec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MEEPCC)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주)카이트엔지니어링, (주)도화엔지니어링
- **세부주제**
  1. 우즈베키스탄 생활폐기물 현황 분석
  2. 생활폐기물 관리 법률 프레임 워크 정책 제언
  3. 종합적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개발

사업 배경 및 목표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수거율 및 위생매립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환경 오염 심화에 직면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2026 신 우즈베키스탄 전략'을 통해 폐기물 수거율 100% 달성 및 재활용률 대폭 상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 관리 체계 전환을 모색 중
◦ 한국의 성공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경험(종량제, EPR 등)을 공유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여건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 법·제도 및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분리배출, EPR 도입 및 인프라 고도화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폐기물 관리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분리배출 체계는 미비하며, 낮은 수거율(약 63%) 및 재활용 시설 부족에 따른 비위생적인 노천 매립 고착화.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재원 마련을 위한 투명한 통계 데이터 시스템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쓰레기종량제(1995년) 도입으로 배출량 감축과 재활용 분리배출의 획기적 전환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단일 생산자책임조합(PRO) 중심의 EPR 제도를 통해 포장재 재활용을 고도화하고,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전 과정의 투명한 디지털 추적 관리 체계 확립

정책 제언

◦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제도를 상업지역에 선행 도입 후 대도시·중소도시로 점진적 확산 방안 권고
◦ 한국형 단일 PRO 체계를 모델로 한 EPR 제도 법제화 및 재활용 부과금 운영을 통한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위생매립지 입지 선정 및 수분 함량이 높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회수 클러스터 조성
◦ 폐기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국가 통합 추적 시스템 도입

성과 및 시사점

◦ 발생, 수거, 재활용, 처분의 전 단계에 걸친 우즈베키스탄의 20년(2027~2046년) 장기 폐기물 관리 로드맵 수립을 바탕으로 순환 경제 전환의 종합 모델 제공
◦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쓰레기종량제와 EPR 제도의 구체적 법제화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리 근거 마련
◦ 주요 정책결정자 대상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의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하여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제도 도입 의지 확보
◦ 도출된 핵심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및 다자개발은행 자금과 연계한 구체적 환경 인프라 구축 후속 사업을 추진할 토대 확립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방안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표준화(Standardization)



- **협력부처**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Ministry of Economy, Environment and Agriculture)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2. 우크라이나 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개선 방안
  3. 국제표준(ISO 56000) 기반 혁신경영 효율화 방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산업 훼손을 극복하고자 전후 재건을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혁신전략(2030) 적극 추진 중
◦ 우수한 과학기술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처 간 분절된 거버넌스, 기업 혁신 유인 부족, 체계적인 혁신 관리 모델 부재의 한계 직면
◦ 한국의 국가혁신체계(NIS) 거버넌스 발전 및 ISO 56000 도입 경험을 공유하여 우크라이나의 효율적인 혁신 정책 실행 로드맵 및 제도화 방안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우크라이나의 국가 혁신 거버넌스 및 기업 지원 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형 혁신 거버넌스 설계, 지역 거점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경영 국제표준 도입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다수 부처로 혁신 정책이 분산되어 컨트롤타워 및 정책 일관성이 부재하고 공공 R&D 성과의 상업화가 저조하며, 장기적인 혁신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투명한 성과 측정 도구 미비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국무조정실 등 강력한 전략적 컨트롤타워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거점 클러스터를 통해 국가 자원을 집중하여 산업 고도화 달성.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제도(KOITA 모델)로 민간 R&D를 촉진하고, 이노베이션포럼 등 민관 협력을 통해 ISO 56000 혁신경영 표준의 실질적 확산 성공

정책 제언

◦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 '국가혁신전략센터(NISC)'를 설립하여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 체계 확립
◦ 한국의 KOITA 모델을 벤치마킹한 기업 R&D 센터 인증제도 및 맞춤형 조세 혜택 도입
◦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스마트 특화 기반 혁신 클러스터 육성
◦ ISO 56000 표준의 공식 번역, 전문 지원 기관 설립 및 자가진단시스템(UISA)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혁신 관리체계 구축

성과 및 시사점

◦ 전후 재건을 단순 인프라 복구가 아닌 국가 혁신 역량 기반의 경제 구조 전환으로 이끌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이행 로드맵 제공
◦ 한국 주요 혁신 기관 방문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통합 거버넌스와 표준화 기반 혁신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확보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R&D 성과 관리 시스템 청사진을 제시하여 부패 방지 및 재건 자금 운용의 신뢰성 확보 토대를 마련
◦ 본 정책 제언을 우크라이나의 '국가혁신전략 2030' 및 향후 EU 통합 이행계획에 직접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 협력 파트너십 확립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테크노파크 운영방안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도시개발부(City of Split), 스플리트시개발공사(Development Agency Split)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테크노파크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2. 스플리트 테크노파크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크로아티아 테크노파크 거버넌스 및 정책 비교 분석
  3. 스플리트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점검
  4.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사업 배경 및 목표

◦ 스플리트시는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주도형 성장을 위해 국가개발전략 2030(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30)을 바탕으로 스플리트 테크노파크(Technology Park Split, TPS) 설립을 추진 중
◦ 테크노파크 중앙건물 등 인프라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지역 내 혁신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및 딥테크(deep tech) 산업 개발 등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운영 전략 미비
◦ 한국의 테크노파크(K-TP), 창조경제혁신센터(CCEI) 및 우수 창업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스플리트 테크노파크의 맞춤형 운영 방안 및 실행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스플리트 지역 혁신생태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정립, 인프라 고도화, 맞춤형 창업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테크노파크 운영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스플리트-달마시아(Split-Dalmatia) 지역 경제는 관광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혁신 주체 간 연계 부족
◦ 테크노 파트 내에 스케일업(성장) 지원 체계, 전문 연구시설(PoC 존 등) 및 전략적 통합 거버넌스 미흡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19개의 테크노파크(K-TP) 및 창조경제혁신센터(CCEI)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 거점으로 활용 중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B2B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포르투갈 리스본은 디지털 인프라 및 혁신 친화적 정책을 기반으로 대학, 스타트업, 학계, 정부 간 협력 중심의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며 스타트업 도시에서 스케일업 혁신 허브로 발전

정책 제언

◦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혁신 생태계 스케일업'으로 구성된 2단계 테크노파크 개발 전략 제시 및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강화
◦ 스플리트 지역 혁신생태계에 적합한 중앙 조정기구 신설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션 체계 개선 로드맵 제시
◦ 공공-민간 협력(PPP) 기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민간 매칭형 투자펀드 사업 모델 제시
◦ 스플리트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17주 글로벌 스타트업 교육 커리큘럼 설계와 KAIST 창업교육 모델 사례 기반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성과 및 시사점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휘 체계 구성 등 KSP 권고안 기반의 정책 기획 및 활용 계획을 확인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혁신 거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선진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한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실행 동력 확보
◦ 세종테크노파크와 스플리트시개발공사(RaST)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기술 실증 사업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국제 협력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및 딥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후속 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 확대

키르기즈공화국 공공투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 **협력부처** 키르기즈공화국 경제상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MOEC)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한국의 평가제도를 활용한 키르기즈공화국 ODA 공공투자사업의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 강화
  2.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M&E) 기준 및 지표 개발
  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개발

사업 배경 및 목표

◦ 키르기즈공화국은 ODA 재원 의존도가 높으나, 신규 ODA 사업 관리 체계 도입 및 모니터링, 평가 체계 미흡
◦ 무상원조 전담 부처인 경제상무부는 현 사업 관리 제도 한계 극복을 위한 자문 요청
◦ 한국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경험과 정부 업무 평가제도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경제상무부 주관 평가제도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강화 목적

자문 내용

키르기즈공화국 ODA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 및 평가 거버넌스 취약성을 진단하고, 한국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후평가 제도화, 지표 체계, 평가 방법론을 아우르는 단계적 실행 계획 제시

현황 분석

◦ 부처 간 역할 중복과 분절화로 인한 통합 조정 기능 부재 및 관리 체계 취약
◦ 성과 및 영향 중심 지표 부재하고 산출물 위주의 모니터링 수행과 모니터링 보고서 지연 및 평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환류 기능 미비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국가재정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직접 환류하는 시스템을 운영
◦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제도화된 ODA 관리·평가 체계를 통해 사업 전주기의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르완다는 ODA 조정·평가 체계를 국가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정책 제언

◦ 국가 M&E 표준 프레임워크 제도화 및 경제상무부 산하 범부처 실무그룹 구성
◦ ODA 사업 사후평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 산출 중심에서 성과·영향 중심으로의 부문별(농업, 에너지, 보건, 교통) 성과 지표 도입
◦ 혼합 연구방법론(Mixed-method) 적용 및 전문가 풀(Pool) 확충을 통한 평가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평가 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체계 확립

성과 및 시사점

◦ 경제상무부 내 평가 전담 부서 및 전문가 풀 확보, 평가 결과 환류 강화 제안 등 실현 가능한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공
◦ (1단계) 시범평가 -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 (3단계) 평가도구 구축 - (4단계) 역량 강화의 단계별 사후평가 제도화 로드맵 확립
◦ 주요 부처(재무부, 에너지부 등) 정책 실무자, 국제기구 및 PIU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및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 경제상무부 주도의 범부처 비공식 실무그룹 구성 및 시범 평가 실시 기반 확보
◦ ODA 재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키르기즈공화국의 국가 발전 전략 정합성 제고 기반 마련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소기업 정책(SME Policy)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s)



- **협력부처** 튀르키예 중소기업진흥청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 KOSGEB)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중소기업 관련 정책 현황 리뷰
  2. 중소기업의 수입대체상품 생산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3. 중소기업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4. 중간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운영 방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만성적인 수입 의존도 심화 및 무역 적자 극복을 위해 중간재 국산화 및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수입대체산업화(ISI) 전략 검토
◦ 튀르키예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나, 생산성 격차 및 기술 사업화 한계로 인해 수입대체품 생산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
◦ 한국의 성공적인 수입대체 발전 경험, 연구개발 상용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공유하여 튀르키예의 제조 역량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목적

자문 내용

튀르키예 중소기업의 정책 환경, 수입대체 역량, R&D 기술이전, 대·중소기업 협력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을 토대로 생산 역량 증진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중소기업의 획일적 분류체계로 인한 정책 맞춤화 한계 및 기술사업화 연계 부족에 따른 저조한 혁신 성과 지속. 특히 대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가 약해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포괄적 법적 기반 및 통합형 디지털 인프라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과 '뿌리기술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핵심 중간재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
◦ 기술보증기금 및 공공연구기관(PRI)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투명한 협력 생태계 구축 달성

정책 제언

◦ 튀르키예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맞춤형 '핵심 뿌리기술기업 지정제도' 도입 및 R&D 패키지 연계 지원
◦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체계 강화 및 단순 하도급을 넘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법 제정
◦ KOSGEB의 디지털 공급업체 DB에 기업 신용 평가 및 동반성장 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하여 플랫폼 실효성 극대화

성과 및 시사점

◦ 튀르키예 정책실무자연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자국의 중소기업 정책 진단 및 실효적 제도 개선 과제(분류 기준 세분화 등) 발굴
◦ 한국의 상생협력 플랫폼(상생누리 등)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KOSGEB 디지털 공급자 DB의 핵심 설계 방향 및 기능 고도화 가이드라인 확립
◦ 단순 보호무역이 아닌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기반의 수입대체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튀르키예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 강화를 통해 향후 한국 혁신 기업의 유럽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교두보를 확충
◦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양국 간 지속 가능한 R&D 역량 강화 및 기술 교류 등 후속 시범사업 추진 기반 마련

폴란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

#중소기업 혁신생태계(SME Innovation Ecosystem)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 **협력부처**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MRiT)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액션플랜 수립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이버보안 부문 혁신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사업 배경 및 목표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분절화된 정부 지원 체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for Enterprise) 수립을 추진 중
◦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으로 AI·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폴란드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모색하고자 KSP 협력을 요청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규제혁신 방안 도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촉진

자문 내용

폴란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한계와 규제 부담을 진단하고, 한국의 데이터·AI 바우처, 규제 샌드박스 및 사이버보안 지원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 채택 및 생태계 활성화 실행 계획 제시

현황 분석

◦ 폴란드 중소기업은 GDP의 약 46.6%를 창출하는 경제의 핵심 주체이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수준은 선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IT 전문인력 부족, 분절화된 정부 지원체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한계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서비스 디지털화 지원사업, 데이터·AI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사이버보안 지원 체계 구축 및 간소화된 보안 인증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

정책 제언

◦ 기업의 기술 성숙도에 맞춘 단계별 디지털·AI 바우처 제도, 디지털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및 관리체계 마련
◦ 혁신 기술 실증을 위한 폴란드형 AI 규제 샌드박스 및 Fast-Track 절차 신설
◦ 권역별 사이버보안 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기술 지원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제공
◦ 영세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보안 인증제 마련

성과 및 시사점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와의 첫 번째 양자 KSP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신규 협력의제 발굴
◦ 협력부처가 2026년 발표 예정인 「기업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for Enterprise)」에 KSP 주요 정책 제언을 반영할 예정
◦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양국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 모색
◦ KSP 사업 종료 후 KDI 및 경제개발기술부의 AI 세미나 공동 주최 추진으로 AI 분야 지식 협력 확대
◦ 폴란드 디지털화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와 AI 샌드박스 관련 후속 KSP 사업('26-'27) 기획을 통해 한-폴 디지털·AI 분야 협력 확대 기반 마련

ADB 공동컨설팅

아르메니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수립 지원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도시 개발(Urban Development)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녹색 건축(Green Building)



- **협력부처** 아르메니아 도시개발위원회(Urban Development Committee, UDC)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레플러스
- **세부주제**
  1. 아르메니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그린빌딩 분야 현황 조사 및 분석
  2. 한국 및 주변국 정책 비교 분석 및 개선 전략 제안
  3. 그린빌딩 확대 장애요소 분석 및 개선 전략 제안
  4. 인접 국가 프로젝트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모음집 제공

사업 배경 및 목표

◦ 아르메니아는 에너지의 71%를 수입에 의존하며, 건물 부문이 최종 에너지 소비의 37.5%를 차지하여 국가적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가 절실
◦ 아르메니아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 중이나 관련 법·제도, 전문성,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행 한계에 직면
◦ 한국의 성공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과 기술 실증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아르메니아 현지에 적합한 맞춤형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및 단계별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아르메니아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과 제도적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한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반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단계별 법제화, 인센티브, 기술 실증을 포괄하는 중장기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대다수 건축물이 소련 시대에 건설되어 노후화 및 단열·기밀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이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설계 기준과 인증 제도가 부재하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대국민 인식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한계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기반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 인증(G-SEED),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신축 공공건물에서 기축 및 민간 건물로 점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확립에 성공

정책 제언

◦ 재정 부담 완화와 기축 건물 비중을 고려하여 신축과 기축 건물의 제도를 동시 다발적으로 정비하는 4단계 로드맵을 제안
◦ 1단계로 기초적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수립 및 대국민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도입, 2단계로 맞춤형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EE Class) 고도화 및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 도입, 3단계 민간 의무화 확대, 4단계 제로에너지 수준의 고도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화

성과 및 시사점

◦ 한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을 번역 제공하여 현지 정책 입안의 실질적 법적 근거 마련
◦ 한국,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4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실증 데이터를 집대성한 벤치마킹 모음집을 발간하여 기술적 참조 모델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 및 한국 제로에너지건축물 현장 시찰을 통해 선진 기술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창출
◦ 향후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한 아르메니아의 대규모 그린빌딩 인프라 후속 사업의 추진 토대 확립

ADB 공동컨설팅

아제르바이잔 고등교육의 혁신허브 전환 - 숨가이트국립대를 중심으로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아제르바이잔 과학교육부(Ministry of Science and Education, MSE)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소시엄(한국과학기술원 + ㈜아르스프락시아)
- **세부주제**
  1. 아제르바이잔 고등교육 제도 현황 분석 및 요약
  2. 숨가이트국립대의 혁신역량 강화 : 현황과 전략
  3. 숨가이트국립대의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및 혁신 허브 구축 방안 수립
  4. 교육부 및 숨가이트국립대 고위급 대상 역량강화 연수

사업 배경 및 목표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및 산업 경쟁력 제고가 절실
◦ 고등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두
◦ 한국의 성공적인 대학 혁신생태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여 숨가이트국립대(SSU)를 지역 산학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아제르바이잔의 고등교육 및 SSU의 산학협력 체계를 트리플 헬릭스(Triple-Helix) 모델로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 기반 국가 연구기관 설립 및 지역 산학협력 모델을 포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SSU는 화학, 물리학 등 기반 학문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 실적이 산업적 응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는 제도가 취약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대학의 재정 및 연구 자율성이 부족하며 정부-산업-대학을 잇는 통합적 기술 이전 생태계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R&D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함. 이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LINC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상생하는 자생적 산학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

정책 제언

◦ 숨가이트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지역 단위 연구·혁신 복합단지(Sabah City) 및 SSU 내 혁신센터 우선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SSU와 지역 산업 간 공동 연구를 확장하는 점진적 추진 모델 도입 권고
◦ 연구 실적 보상 체계 정비, 산업 맞춤형 융합 커리큘럼 개발 및 교원 평가 제도 개선 추진
◦ 한국의 대학(KAIST, POSTECH 등)과 연계한 교수진 교류 및 공동 학위 프로그램 연계 운영

성과 및 시사점

◦ 숨가이트 국립대의 산학혁신 허브 전환을 위한 명확한 투자 예산 규모와 3가지 단계별 정책 실행 옵션을 도출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정책 결정 논리적 근거 확보
◦ 아제르바이잔 고위 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혁신 모델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이행 동력 창출
◦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전략적 공동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마스터플랜이 향후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활용한 실질적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 확립
◦ 단순 자문을 넘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 파트너십 구축 기반 마련

EBRD 공동컨설팅

키르기즈공화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로드맵 수립

#상수도 공급(Water Supply) #스마트 물 관리(Smart Water Management)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협력부처** 비슈케크 상하수도관리국 (Bishkek Water Company, Bishkekvodocanal)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주)위플랫, (사)대한상하수도학회
- **세부주제**
  1. 비슈케크시의 포괄적인 도시 물 관리 현황 평가
  2. 한국 스마트물관리(SWM) 경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비슈케크시의 스마트 물관리 도입 로드맵 개발
  4. 정책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최종보고회 개최

사업 배경 및 목표

◦ 키르기즈공화국은 수자원 접근성이 양호하나,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관리 부족 등으로 용수 공급 효율이 낮고, 특히 수도 비슈케크는 최근 이상기후, 식수원 오염 등으로 물 부족 문제 심화
◦ 정부는 '중장기 수자원 전략 2024'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 방안을 개선 중이나 정보통신기술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ICT를 활용한 수자원 공급의 탄력성 및 효율성 증진, 성능 및 시스템 신뢰도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 대두
◦ EBRD는 한국의 SWM을 키르기즈공화국과 공유하여 협력국 주요 도시의 SWM 도입을 위한 맞춤형 단계별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역량 강화 지원 목적

자문 내용

비슈케크의 물 관리 정책 및 ICT 활용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한국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3단계 디지털 전환 로드맵과 구체적 도입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비슈케크시는 기후변화, 인프라 노후화, 비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로 인해 무수수량(NRW, 누수율 약 40%)이 높고, 스마트 수도미터 보급률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부재하며 요금 현실화 및 거버넌스 체계도 미비하여 SWM 전면 도입의 재정적·기술적 한계에 직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망을 블록화하고 실시간 누수 감지, 통합 관제(SCADA) 및 스마트 미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수율 향상 달성에 성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성과보장형 계약(PBC)을 통해 효과적인 누수 저감 및 운영 효율화 모델 확립

정책 제언

◦ SCADA/IoT 기반 파일럿 사업 우선 추진 및 DMA(블록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계량기 도입
◦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등 3단계(13년, 48년, 9~15년) 로드맵 제안
◦ 안정적 관제를 위해 LoRaWAN과 LTE 하이브리드 통신망 적용 권고
◦ 유무상 ODA를 결합한 혼합재원 조달 및 성과보장형 시범 사업 추진
◦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청 내 SWM 전담 TF 조직 신설

성과 및 시사점

◦ 비슈케크시의 스마트물관리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정책 이행 로드맵과 핵심성과지표(KPI), 데이터 요구 목록 등 실질적 실행 프레임워크 제공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역 급수 개선 투자사업과 연계 가능한 소규모 도시 대상 SWM 시범 사업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보 기반 마련
◦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정수장 및 스마트 관제센터를 직접 시찰함으로써 선진 물관리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창출
◦ 지속 가능한 혼합재원 유치 전략 설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및 ODA 연계 확산기반 확립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콰도르 국세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 모델 개선 방안

#전자 세정(Digital Tax Administration)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데이터 분석 모델 (Data Analytics Models) #데이터 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국세 역량 강화(Tax 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에콰도르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SRI)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TG
- **세부주제**
  1. 국세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개선 방안
  2. 국세 데이터 분석 모델 강화 방안
  3. 국세 데이터 관련 전문 직종 교육 계획

사업 배경 및 목표

◦ 에콰도르는 인접국 대비 높은 탈세율로 인해 재정 기반이 제약받고 있어 조세 당국은 조세 순응도 제고 및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

◦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협조융자를 통해 「국세 행정 현대화 프로그램(EC-1253: Program to Improve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s)」을 추진 중으로 디지털 세무행정 전환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시급

◦ 한국의 국세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데이터 기반 예측 모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분석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목적

자문 내용

에콰도르 국세청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NTIS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분석모형 고도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자 세정 고도화 방안 수립

현황 분석

◦ 부서 간 데이터 중복 및 포맷 불일치가 심각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합적 조정이 어려운 분절적 구조 고착

◦ 수작업 중심 분석과 비정형 데이터 활용 미흡으로 인해 고위험 납세자 식별이나 실시간 세수 예측을 위한 지능형 모델 적용 저조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 국세청은 외부 제3자 정보의 체계적 연계 수집과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기반 실시간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탈세 사전 차단 모범 사례를 확립

◦ 체계적 메타데이터 관리와 기계학습 기반 리스크 스코어링 도입, 전문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조직 내 디지털 역량 고도화에 성공

정책 제언

◦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중심의 강력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기반(RACI) 데이터 소유권 체계 명문화

◦ 부서 간 정보 단절 해소를 위한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DW) 설계 및 중앙 메타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자동화된 데이터 품질 관리(DQM) 도입

◦ 기계학습 기반의 납세자 리스크 점수화 및 세수 예측 모델 설계와 역할별 맞춤형 직관적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전환 및 분산 데이터베이스 도입과 철저한 정보보안 프레임워크 수립

◦ 데이터 엔지니어, 아키텍트 등 역할별 특화된 3단계(입문-중급-심화) 교육 커리큘럼 도입 및 내부 강사 육성 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시사점

◦ 조직 구조 재편, 거버넌스 법제화, 기술 인프라 아키텍처를 전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가이드라인 제공

◦ 고품질 데이터 확보 체계와 지능형 예측 모델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존 수작업 중심 감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정밀 타겟팅 세무행정으로의 실질적 전환 토대 마련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한국 국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등 핵심 IT 인프라를 직접 시찰함으로써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동력 확보

◦ 본 사업의 결과물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 모델은 IDB·EDCF 협조융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콰도르 국세 행정 개선 프로그램'의 세부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에콰도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 **협력부처** 에콰도르 교통공공사업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Public Works, MTOP)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물류혁명코리아, 국토연구원
- **세부주제**
  1. 에콰도르의 물류산업 및 인프라 현황 분석
  2. 스마트 물류의 글로벌 동향분석
  3. 에콰도르 국가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스마트물류 인프라 개발 로드맵 수립

사업 배경 및 목표

◦ 에콰도르는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처리하는 항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녔으나, 심각한 항만 적체, 노후화된 인프라, 제한적인 디지털화로 인해 물류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달하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

◦ 최근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을 앞두고 교역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통합 물류망 구축 절실

◦ 한국의 선진 물류정책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에콰도르 환경에 최적화된 단·중·장기 스마트 물류 인프라 발전 전략과 실행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에콰도르의 국가 물류정책, 기반 시설, 데이터 관리 체계를 종합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공항·내륙 거점의 스마트화 및 국가통합물류망 구축을 포괄하는 단계별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에콰도르의 국가 물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부재로 인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곤란. 항만 및 공항 인프라의 자동화 수준이 매우 낮고, 복잡한 수작업 중심의 통관·검역 절차로 인해 화물 처리 효율성 저하 고착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강력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주기적 국가물류비 산정을 통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킴. 국가 단위의 항만(PORT-MIS) 및 항공(AirCIS) 통합물류시스템을 운영하며, 부산 신항 사례와 같이 AI와 5G 기반의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 생태계 성공적 안착

정책 제언

◦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법제화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거점 조성 및 주요 항만·공항 내 스마트 운영시스템(TOS 등) 선도 도입

◦ 콜롬비아 국경 지역과 연계한 다목적 내륙항(Dry Port) 개발 및 도심 내 마이크로 허브 등 생활물류 인프라 재정비

◦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국가통합물류정보플랫폼(NLIC 형) 구축 및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제 도입 및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성과 및 시사점

◦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6대 전략 및 25개 세부 과제를 단기·중기·장기(2026~2035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여 에콰도르 정부에 강력한 정책 실행 근거 제공

◦ 국가 물류통계 고도화, 과야킬 스마트 항만 실증, 국경 연계 내륙항 개발 등 5대 핵심 후속 협력 과제를 선별하고 소요 예산을 도출하여 실질적 인프라 투자 방향 제시

◦ 교통공공사업부 장관 등 고위급 사절단 대상 방한 연수 시 한국의 부산항 완전 자동화 터미널과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를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도입 동력 확고히 창출

◦ 국내 물류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업무협의회 및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향후 한국 민간 기업의 에콰도르 물류 시장 진출 및 민관협력(PPP) 참여를 위한 교두보 확립

◦ 도출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향후 미주개발은행(IDB) 및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연계한 대규모 국가 디지털 물류 전환 사업의 추진 토대 마련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디지털 등록 시스템 도입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설계(Platform Design)



- **협력부처** 온두라스 사회개발부(Secretariat of Social Development, SEDESOL)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관리자 친화적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 전략
  2.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설계
  3. 디지털 등록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사업 배경 및 목표

◦ 온두라스는 빈곤 감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나, 재정 제약과 기관 간 데이터 분절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의 근본적 한계 직면
◦ 온두라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을 해결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
◦ 한국의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디지털 등록 시스템 구축 전략과 지속 가능한 운영 프레임워크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온두라스의 사회보장 및 행정 데이터 연계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재설계, 대국민 디지털 플랫폼 구축, 평가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현황 분석

◦ 사회보장등록시스템(SIRBHO), 해외이주자 지원시스템(SIAMIR) 등 복지제도 관련 시스템과 국민등록청(RNP) 등의 주요 시스템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와 행정 비효율 발생 및 부처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할 통합된 정보 관리 체계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흩어진 복지 데이터를 통합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과 대국민 포털 '복지로'를 구축하였으며, 확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70여 개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부정수급 원천 차단 달성

정책 제언

◦ 단기적으로 SEDESOL과 국민등록청(RNP) 중심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와 주기 단축을 바탕으로 기존 복지 수혜자 조사(SIRBHO FSU) 효율화 및 장애인 ID 카드 자동 발급 체계 도입 등 서비스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RNP, 국세청 등과 연동하여 통합 복지 조사, 신청, 급여 지급을 지원하는 원스톱 대국민 사회복지 디지털 플랫폼 'SOL' 설계 및 구축.
◦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기반 확립 및 시스템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속가능성 평가 프레임워크, 핵심성과지표(KPI) 도입

성과 및 시사점

◦ 사회개발부와 국민등록청(RNP) 간의 정보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질적 단기 실행 계획 제공
◦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시스템 성과 관리 지침 확립
◦ 국제기구(IDB, WB 등)와의 협력 및 재원 조달 전략을 연계 제시함으로써 온두라스 사회보장 체계 개선의 중장기적 파트너십 교두보 마련
◦ 사회개발부 장관 등 고위 정책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및 실무자 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 디지털 복지 전환 경험 전수 및 실행 동력 확보
◦ 본 KSP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사업'이 성사되어 실질적인 후속 시스템 구축 착수 성과 달성

온두라스 인프라 및 교통 정보시스템 개발전략 수립

#교통 계획(Transport Planning)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교통 안전(Traffic Safety)



- **협력부처** 온두라스 인프라교통부(Secretaria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SIT)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온두라스 도로 개발을 위한 전략과 정책
  2.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로 정책 개발
  3. 온두라스 국가 교통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 설계
  4. 온두라스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제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온두라스는 산악 지형과 잦은 기후 재해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하나, 체계적인 중장기 교통 계획 부재와 열악한 인프라 투자 환경으로 물류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직면
◦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과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기후 탄력적 도로 설계 필요
◦ 한국의 성공적인 도로 인프라 계획, 지속 가능한 설계, 국가교통DB 구축 및 안전 관리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온두라스 실정에 맞는 통합적 교통 인프라 개발 전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온두라스의 도로 투자 체계, 기후 취약성, 데이터 수집 현황 및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인프라 발전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 기후 탄력적 재설계, 교통DB 구축을 위한 종합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단기적 정치 수요에 의존하는 공공 투자 결정과 외부 차입 의존 재원 구조로 인해 장기적 도로 확충에 한계 존재
◦ 기후를 고려한 배수 및 포장 설계 기준이 미흡하여 재해 피해가 극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집중형 교통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난관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PFS) 제도를 도입해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조달 성공. 국가교통DB(KTDB)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켰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터널 사용 확대 및 배수 설계 기준 대폭 상향 달성

정책 제언

◦ 장기 국가개발계획 수립 및 한국형 예비타당성조사(PFS)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합리적 타당성 평가 체계 확립
◦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여 도로 기하구조 및 배수 시스템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 포장유지관리(PMS) 시스템 도입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및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체계적 구축 및 사고 다발 구간 집중 개선 및 보편적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하는 4E(예방·교육·단속·대응) 기반의 통합적 안전 정책 실행

성과 및 시사점

◦ 단편적 투자에 머물던 온두라스 도로 인프라 정책을 계획-예산-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적 공공투자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청사진 제공
◦ 기후 탄력적 도로 설계 기준과 스마트 포장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기술적 토대 마련
◦ 인프라교통부 고위 인사의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교통DB 전담 조직 신설 등 실질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기반 마련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교통센터 인프라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시스템 도입을 실행할 동력 창출
◦ 본 사업의 정책 제언이 향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콜롬비아 과학 및 산업 분야 디지털 측정 전환 컨설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학 및 산업 계량 측정(Scientific and Industrial Metrology)
#품질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디지털 교정 인증서(Digital Calibration Certificate)



- **협력부처** 콜롬비아 국립계량연구소(National Metrology Institute)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현대경제연구원(HRI)
- **세부주제**
  1. 콜롬비아 과학 및 산업 분야 측정 기술 현황 분석
  2. 한국의 측정기술 서비스 디지털 전환 경험
  3. 기업의 디지털 측정 전환 지원방안 수립
  4. 콜롬비아 과학 및 산업 분야 디지털 측정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사업 배경 및 목표

◦ 콜롬비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추어 국가 생산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과학·산업 분야 계량 측정의 디지털 전환과 품질인프라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디지털 교정 성적서 발급, 데이터 관리 등의 인프라 도입이 저조하며 전문 인력 부족 및 투자 부담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

◦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기반 품질인프라 전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콜롬비아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맞춤형 디지털 측정 전략 및 지원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콜롬비아 과학·산업 계량 측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한국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제도,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맞춤형 전환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대다수의 현지 시험소가 수작업과 단독 도구에 의존하고 있어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및 디지털 교정 인증서(DCC)의 도입이 저조

◦ 국가 차원의 전략과 현장 실험실 간의 실행 괴리가 존재하며 IT 및 계량 전문 인력 부족 한계 노출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측정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편입 성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도로 블록체인 기반 DCC, 자동 시험보고서 플랫폼(Claydox), 스마트랩 구축 등 다층적 혁신 달성

정책 제언

◦ NMI, ONAC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디지털 계량 로드맵' 수립

◦ ISO/IEC 17025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DCC 발급 시스템 및 현지화된 경량 LIMS 도입

◦ LIMS, DCC 운영 및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실무 중심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 편성

◦ ODA를 활용한 음향 계측 인프라 시범 사업 추진 및 중소기업 디지털 현대화 자금 지원

성과 및 시사점

◦ 콜롬비아 품질인프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원격 시험 및 클라우드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기술 도입 가이드라인 제공

◦ 초청 연수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정책실무자들이 한국의 스마트공장 및 선진 시험·인증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정책 실행 동력 창출

◦ 한국의 자동화 플랫폼(Claydox 등)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공하여 콜롬비아의 디지털 측정 생태계 고도화 발판 마련

◦ 음향 측정 등 신규 분야의 인프라 ODA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여, 향후 한국과 콜롬비아 간 지속 가능한 장기적 산업·기술 협력 토대 확립

쿠바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전략

#환경 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 **협력부처** 쿠바 과학기술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CITMA)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국기업지식연구원㈜, 대흥에코
- **세부주제**
  1. 쿠바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 분리수거 및 재활용 패턴을 고려한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감소 지원정책 마련
  2.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정책이 쿠바 산업별·가계별 주요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최신 기술 소개 및 대(對) 국민 인식제고 방안 마련
  3. 플라스틱 오염감소 지원을 위한 국제/국내 인센티브 현황 분석과 정책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4.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배경 및 목표

◦ 관광산업 중심의 쿠바는 일회용품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대다수가 매립·방치되어 카리브해 연안 환경 오염 심화

◦ 쿠바 정부는 '국가환경전략'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순환 경제 전환을 목표로 규제를 추진 중이나, 대체 소재 공급망과 실질적 실행력 미비로 한계 직면

◦ 한국의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EPR, 종량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쿠바 여건에 최적화된 일회용품 규제, 인센티브 설계 및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를 포괄하는 종합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쿠바의 플라스틱 소비 및 폐기물 관리 생태계를 종합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규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순환경제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쿠바는 플라스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비공식 수거망 위주의 파편화된 구조로 인해 재활용 효율성 저하 고착

◦ '폐기물관리법' 등 기본 법제는 마련되었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보증금제 등 현대적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하고 해양 오염을 관측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미흡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토대로 쓰레기종량제, EPR 제도, 철저한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다회용컵 보증금제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공공 주도의 친환경 인프라 확립 성공

정책 제언

◦ 단일 사용 비중이 높은 일회용품의 단계적 감축 규제 및 정부조달을 통한 대체소재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도입

◦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설비 보조금을 결합한 3단계 인센티브 중장기 로드맵 실행

◦ 음료병 및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EPR 제도와 보증금 환불제 시범 도입

◦ 공공·관광시설 중심의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 및 대국민 참여형 'Zero Plastico Cuba' 캠페인 전개

◦ 환경연구소(CEAC)와 보건위생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 플라스틱 오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성과 및 시사점

◦ 단순한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대체산업 육성과 인센티브가 결합된 실질적인 순환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다회용기 세척센터 및 첨단 재활용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하여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제도 도입 동력 창출

◦ 재활용률 제고(2035년 60% 목표) 및 비공식 수거망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도출된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 및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CF) 등 다자 협력 기반의 대규모 환경 후속 사업의 추진 토대 확립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



- **협력부처** 페루 통상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MINCETUR)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세부주제**
  1. VUCE에 통합된 원산지 판정·관리시스템 검토 및 개선 방안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3.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을 위한 페루 원산지 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

사업 배경 및 목표

◦ 페루는 총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전체 수출의 87%가 FTA 체결국으로 향하는 등 활발한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 충족 및 자율발급 활용에 근본적 한계 직면
◦ 페루의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는 기관발급 서비스만 제공하며, 사후 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 자가 판정 및 증빙서류 관리 기능이 부재
◦ 한국의 FTA Korea 시스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VUCE 2.0 고도화를 위한 원산지 관리시스템 타당성 검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글로벌 공급망 실사(CSDDD) 등 신규 통상 규범 대응 전략 제시

자문 내용

페루 원산지 관리 체계와 FTA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자동화된 판정 및 문서 보관 기능을 갖춘 한국의 FTA 시스템과 민관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VUCE 고도화 로드맵과 역량 강화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VUCE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원산지진술서를 사전 승인받는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자율발급 지원 및 전자적 서류 보관 기능이 부재
◦ FTA 교육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산업별 특화 교육이 부족하며, 신규 글로벌 통상 규범(공급망 실사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 극히 저조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FTA Korea 시스템을 통해 품목분류, 자동 원산지 판정, 서류 보관 기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율 발급을 성공적으로 지원 중으로 44개 이상의 맞춤형 FTA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및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 보급 선도

정책 제언

◦ VUCE 시스템에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판정, 증명서 자율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 사후 검증서류 관리 기능을 통합 개발하는 VUCE 2.0 고도화 방안 제안
◦ 페루의 산업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도입과 페루형 원산지 전문가 양성 제도 신설
◦ 수출 구조를 반영한 공급망 실사 전담 조직 구성 및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성과 및 시사점

◦ 통상관광부가 추진 중인 VUCE 2.0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즉시 반영 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 및 3개년 이행 예산안 도출
◦ 자율 발급 기능 전자화 시 페루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연간 최대 2,670만 달러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 창출 기대
◦ 정책 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페루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전자무역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 의지 고취 및 실행 동력 확보
◦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기업 교육과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페루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편입 및 수출 경쟁력 제고 토대 마련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군 육성방안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제조업(Manufacturing)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페루 생산부 (Ministry of Production, PRODUCE)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산업연구원(KIET)
- **세부주제**
  1.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군 현황 및 실태
  2.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경험 공유
  3.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군 육성 정책 로드맵 수립

사업 배경 및 목표

◦ 페루 조선산업은 노후화된 인프라, 설계 역량 부족, 공급망 미성숙으로 인해 수리 및 소형 선박 건조에 국한되어 고부가가치 창출 한계 직면
◦ 그러나 최근 대형 항만 개발에 따른 해양 물류 수요 증가 및 군함·어선 현대화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중남미 조선산업 허브로의 도약 적극 추진 중
◦ 한국의 성공적인 조선산업 육성 경험(법·제도 정비, 기자재 국산화, 인력양성)을 벤치마킹하여 페루 실정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선산업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페루 조선산업의 밸류체인 및 역량을 종합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궤적을 바탕으로 법 제도 정비, 인프라 클러스터화, 핵심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15년 장기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국영 조선소(SIMA-PERU) 중심의 생산 체계로 핵심 건조 설비가 부족하며, 엔진 등 고부가 기자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 3D 설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이 전무하고, 국제 선급(ISO 등) 인증 미비로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 존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 및 계획조선을 통해 대형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고부가 선종 전환과 선도적인 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립 성공

정책 제언

◦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전담 법안인 '조선산업 육성법' 조속 제정 및 기자재 생산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IGV) 감면 명문화
◦ 어선 현대화 사업 등 초기 자체 수요 창출을 통한 생태계 자생력 확보 및 중남미 수리조선 시장으로의 단계적 확장
◦ 품질원(INACAL) 주도의 국제 인증 획득 지원 및 리마·Callao 권역 특화 조선 클러스터 조성. 수입, 부분 조립, 자체 생산으로 이어지는 4단계 기자재 국산화 모델 안착
◦ 한국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기능공 및 고급 설계 인력 양성 체계 도입

성과 및 시사점

◦ 한국의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페루의 중남미 시장 90% 점유율 확보를 위한 15년 단위(기반 확보, 경쟁력 확보, 비전 달성)의 구체적 액션플랜 제공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 시 한국 주요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 공업협동조합 등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밸류체인을 벤치마킹할 동력을 확고히 창출
◦ 페루 생산부와 한국 중소조선연구원, HD현대 등 민관 핵심 주체 간의 기술 이전 및 인적 자원 교류를 위한 실질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향후 페루 정부가 주도하는 해양 인프라 및 방산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해양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동맹 기반 확립

CAF 공동컨설팅

에콰도르 쿠엔카 이동량관측소를 통한 도심교통관리 강화

#도시 교통(Urban Transport)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스마트시티 개발(Smart City Development)



- **협력부처** 에콰도르 쿠엔카 시정부(Municipality of Cuenca), 쿠엔카교통공사(Cuenca Municipal Public Company for Mobility, Transit and Transportation, EMOV EP)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울인포테크
- **세부주제**
  1. 쿠엔카시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DB 현황 파악
  2. 한국의 도시 내 이동량 관측소 선진사례 분석
  3. 이동량 관측소 구축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4. 대중교통체계 개선 정책 제언

사업 배경 및 목표

- 에콰도르 쿠엔카시는 인구 급증과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로 심각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에 직면해 있으며, 모빌리티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 존재
- 중남미개발은행(CAF)과 협력하여 한국의 도시 내 이동량 관측소(UMO) 및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을 벤치마킹
-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능형 도심 교통 관리 및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쿠엔카시의 교통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의 스마트 교통시스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신호관제센터, 트램(Tranvia), 보안관제센터(CSC), 버스운송협회 등 여러 기관이 교통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기관 간 실시간 연계 및 통합 플랫폼 확장이 어렵고 데이터 형식의 비표준성과 통신 구조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 기반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서울시 TOPIS(교통정보센터) 및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을 통해 대중교통, 도로교통, 방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 및 공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혼잡 완화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 개편, 통합요금제를 성공적으로 도입

정책 제언

- 단기적으로 도시이동량관측소(UMO)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기반의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안 제안
-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교통신호제어시스템(SCATS)을 연계한 도시교통정보센터 고도화 및 대시민 앱 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지정 및 저상버스·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
-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교통데이터 위원회 설치 및 「모빌리티 데이터 기본 조례」 제정 등 통합적 법제도 정비 제안

성과 및 시사점

- 쿠엔카시 교통 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실행 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
- 사업 실행 가능성 강화를 위해 무상원조(ODA), 유상원조(EDCF), 다자개발은행(MDB) 자금을 결합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모델 확립
- 교통 관련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대상 방한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선진 ITS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 도입 동력 창출
- 향후 쿠엔카시의 단순 교통 관리를 넘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체계로 진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거버넌스 개선 토대 마련

IDB 공동컨설팅

아르헨티나 디지털 인프라 활용방안 공동자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홍수 조기경보 및 배수시스템 개선

#수자원 관리(Water Resources Management)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
#도시 개발(Urban Development)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 **협력부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인프라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the City of Buenos Aires, MOI)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인하대학교, 한국토코넷㈜, ㈜한국종합기술)
- **세부주제**
  1. 부에노스아이레스市 홍수피해 저감 시스템 및 계획 검토·분석
  2. 한국 사례 분석 및 사례에 기반한 홍수피해 완화 개선방안 제언
  3.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사업 발굴
  4. 한국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식 교류

사업 배경 및 목표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평탄한 지형, 급격한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치명적인 도시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존 배수 인프라 및 조기경보 체계의 노후화로 인한 한계에 직면
-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및 도심 홍수 대응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최적화된 홍수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지속 가능한 배수시스템(SuDS) 도입 전략 및 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배수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진단하고, 한국의 혁신적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 자연기반해법(NbS) 도입,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대다수 하천이 20세기 중반에 복개되어 지하 관로망에 의존하고 있어 불투수면적 확대로 인한 유출량 급증에 대응 불가
- 기존 폭풍 조기경보 시스템(SAT)은 유지관리 부재, 관측망 가동률 저하 및 파편화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실시간 예측 및 상황 대처 기능 상실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서울 청계천 복원 및 저영향개발(LID) 조례화를 통해 빗물 침투·저류 기능을 복원하는 성공적인 생태적 도시재생을 달성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수자원 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홍수 예측 시스템을 연계한 첨단 예경보 생태계 운영 중

정책 제언

- 남부 취약 유역(Cildáñez 등)을 중심으로 복개 하천 부분 개방 및 저류지 조성을 포함하는 자연기반해법(NbS) 시범사업 우선 도입 권고
- 기존 SAT를 웹 기반 GIS 및 AI 예측 기능이 통합된 차세대 수자원정보시스템(WRIS-BA)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설계
- 파편화된 재난 대응 권한 일원화를 위한 상설 전담 기구(물순환안전국) 신설 및 3단계 장기 공적 자금 조달 로드맵 수립

성과 및 시사점

- 소외되었던 남부 4개 유역 중심의 배수시스템 개선 및 수자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여 미주개발은행(IDB) 후속 투자 연계 기반 확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MDB 환경협력 기술 지원 프로그램(TA)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 초안을 완성함으로써 1.2억 달러 규모의 본 사업 추진 논리를 선제적으로 확립
- 정책실무자연수 시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한강홍수통제소, 대심도 터널 등 한국의 인프라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시스템 개편 동력 도출
- 기존 인프라 정책을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물관리 및 회복탄력성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 확립

IDB 공동컨설팅

콜롬비아 기후탄력적 도로 인프라 조성

#도로 인프라(Road Infrastructure)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자연재해 관리(Natural Disaster Managemen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콜롬비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 ㈜태조엔지니어링)
- **세부주제**
  1. 신속대응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
  2. 마니살레스-마리끼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후탄력적 도로 유지관리
  3. 정책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배경 및 목표

◦ 콜롬비아는 안데스산맥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도로 유실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직면
◦ 콜롬비아 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은 도로 인프라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 중이나 예산 제약 및 대응 체계 미비로 한계 노출
◦ 한국의 재난 신속대응체계 및 산악지 도로 유지관리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콜롬비아 현지에 적합한 맞춤형 기후탄력적 도로 관리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콜롬비아의 재난 신속대응체계와 마니살레스-마리끼타 도로의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개편, 통신망 구축 및 기후 탄력적 설계 방안 제시

현황 분석

◦ 부처 간의 역할 및 권한이 불명확하고 예산 집행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에 한계
◦ 주요 산사태 다발 구간인 마니살레스-마리끼타 도로는 배수체계가 미비하고 통신 음영 지역이 많아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수집 및 복구의 지연 발생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산지부 도로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중매립센서를 활용한 비탈면 조기경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

정책 제언

◦ 현장 초동 조치를 위한 세부 표준운영절차(SOP) 제정 및 산악 지역 내 초단파(VHF) 무선 중계기 기반 비상통신망 시범 구축의 중장기 전략 제언
◦ 한국의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을 적용한 마니살레스-마리끼타 구간 사면 안정화 및 계곡부 토석류 대책(사방댐 등) 적용 방안 제안
◦ 도심 통과 구간 교통 체증 및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추진 방안 및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중매립형 센서 기반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제안

성과 및 시사점

◦ 단편적인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던 콜롬비아 도로 관리 정책을 예방 중심의 기후 회복력 확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플랜 제공
◦ 초기 통신망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재원 배분의 명확한 근거 확보
◦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터널 관리사무소 및 교통정보센터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시스템 도입 동력 창출
◦ 본 사업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미주개발은행(IDB)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한 도로 인프라 재원 조달 가능성 확립

IDB 공동컨설팅

파라과이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현대화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도로 인프라(Road Infrastructure)
#통행료 징수 시스템(Toll Collection System)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s, MOPC)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삼안 컨소시엄 (㈜삼안, 에스트래픽㈜, 한국도로공사)
- **세부주제**
  1. 신규 통행요금소 입지 전략
  2. 지속 가능한 통행요금 조정 전략
  3. 통행요금 수납 모델 설계
  4. 통행요금 수납 및 관리기술 적용방안
  5. 각종 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사업 배경 및 목표

◦ 파라과이는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육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재원의 부족으로 물류 효율성 저하 및 국가경쟁력 하락 직면
◦ 현재 노후화된 수동 중심의 요금 수납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 정체와 요금 징수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 발생
◦ 한국의 '하이패스(Hi-Pass)' 시스템 등 첨단 요금징수(ETC)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지속 가능한 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현대화 및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파라과이의 요금 징수 기반시설 및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국가정산센터 구축, 통행요금 조정 및 신규 입지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파라과이 내 20개 요금소의 통행료 수동 징수 및 육안 판단에 의존한 차종 분류로 인해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 공공 및 민자 구간 간 RFID 호환성 미확보 및 현행 통행요금 수준 저조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 재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 상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및 선감지·후처리 방식으로 다차로 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정차 통행 실현 및 교통 혼잡을 완화함.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서 전국 단위 요금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요금 수익을 도로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구조 정착

정책 제언

◦ 전 차로에서 RFID, 신용카드, 현금 결제를 통합 지원하는 복합(Hybrid) 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기존 요금소를 전면 개편하고 징수된 요금의 투명한 검증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정산센터' 신설 필요
◦ 국가 경제 성장축에 따른 신규 요금소의 전략적 배치 및 일상 통행권 내 거주자에 대한 통행요금 면제와 향후 체계적인 유료도로 관리를 위한 「파라과이 도로공사법」 제정 권고

성과 및 시사점

◦ 파라과이 전역의 요금소 현대화 및 국가정산센터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시스템 설계안과 소요 예산을 도출하여, 파라과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근거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실제 톨게이트 설비 제작 현장과 첨단 운영 센터를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시스템 도입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굳건한 실행 의지 확보
◦ 기술적 자문을 넘어 향후 법·제도 개선(유료도로 관리청 신설 등)에 이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 운영 기반 마련
◦ 마스터플랜 기반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의 공적개발원조(EDCF 등)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시스템 구축 후속 사업의 추진 토대를 확립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요르단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 설계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 Energy Generation)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 **협력부처**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요르단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금 (Jordan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Fund, JREEEF)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세부주제**
  1. 가구부문 보조금 사업 평가: 태양열 온수 시스템 보조금
  2. 산업부문 보조금 사업 평가: 에너지 감사 프로그램
  3. 보조금 프로그램 개선 실행(안)
  4. 요르단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후속 프로젝트 제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74%에 달하는 요르단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JREEEF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중심의 투자형 보조금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나, 기존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SWH) 및 산업용 에너지 감사 등 보조금 사업은 대상자 선별이 정교하지 못하고 사후 성과 관리가 미흡하여 재원 효율성 확보에 근본적 한계 노출

◦ 한국의 성과 기반 에너지 복지 및 효율화 정책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정밀 타겟팅,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재원 조달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보조금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가정 부문의 SWH 보급 사업과 산업 부문의 에너지 감사 프로그램을 심층 진단하고, 수혜자 선별 고도화,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M&E), 혼합 금융을 통한 재원 다각화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가정용 SWH의 경우 복잡한 대출 절차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설비 결함률이 50%에 달하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혜택 집중도 저조

◦ 산업 부문은 무료 에너지 감사 이후 실제 설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사후 관리 부재의 구조적 문제 노출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 시 ISO 52016 진단을 적용하여 철저한 전주기 품질 관리 달성 및 산업체 에너지 진단 결과를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절감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성공

정책 제언

◦ JREEEF의 보조금 데이터와 국가 사회복지 DB를 연동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자동 식별하는 정밀 타겟팅 체계 도입

◦ 시공업체 인증제 및 사후 유지보수 의무화를 통한 가정용 SWH 설치 품질 보증 제도 확립

◦ 산업 부문 에너지 감사 시 표준화된 진단 DB 구축 및 권고 이행 시 보조금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도입

◦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는 성과 기반 모니터링(M&E) 시스템 구축

◦ 전기요금 부가금, 국제 기후재원(GCF), 에스코(ESCO) 모델을 결합한 혼합형 자금 조달 로드맵 실행

성과 및 시사점

◦ 단순 설비 보급에 머물던 요르단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수혜자 맞춤형 정밀 타겟팅과 데이터 중심의 성과 관리 기반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액션플랜 제공

◦ 요르단 정책결정자 대상 방한 연수를 통해 한국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산업단지 효율화 현장을 시찰하게 하여 제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단기적 재정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기후 재원과 연계 가능한 3대 핵심 후속 협력 사업(공공건물 디지털 효율화 등) 타당성 기반 구축

◦ 한국 에너지 효율화 기기 제조사 및 ESCO 기업들이 요르단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민관협력 파트너십 교두보 확립

EBRD 공동컨설팅

모로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 체계 수립

#디지털 금융 서비스(Digital Financial Services)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금융 안정 및 규제(Financial Stability & Regulation)



- **협력부처** 모로코 중앙은행 (Bank Al-Maghrib, BAM)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KFT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세부주제**
  1. 최신 핀테크 기술 소개
  2. 핀테크 지원 규제 전략 개발: 프레임워크 및 모범사례
  3. 중소기업을 위한 핀테크 및 디지털 솔루션: 청년·여성 운영 기업 중심

사업 배경 및 목표

◦ 모로코 정부는 국가금융포용성전략(NFIS)을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심각한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포용성 개선 적극 추진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체계와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나, 모로코 중앙은행(BAM)의 관련 법·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한계 직면
◦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및 규제 혁신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모로코 맞춤형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및 금융 포용성 증진 로드맵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모로코의 핀테크 기술 현황과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 파이낸스 우선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대안신용평가(ACS) 구축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모로코는 현금결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청년·여성 중소기업의 대출 거절률 및 파이낸싱 갭이 심각
◦ 크라우드펀딩이나 결제기관 규제 등은 일부 존재하나, 포괄적인 핀테크 기본법 및 오픈뱅킹을 위한 표준 API 인프라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핀테크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안착
◦ 국제기구(IMF, BIS 등)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비례적 규제 적용 및 가이드라인 확립 강조

정책 제언

◦ 금융 혁신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오픈 파이낸스를 최우선 도입 기술로 선정하고 대형 은행의 참여 의무화 및 표준 API 제정 권고
◦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분야는 유연한 규제 샌드박스 및 테스트베드를 통해 단계적 도입
◦ 청년 및 여성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통신 데이터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ACS) 인프라 확충 및 원격 비대면 계좌 개설 규제 완화
◦ 핀테크 생태계를 총괄 관리할 전담 위원회 신설

성과 및 시사점

◦ 모로코 중앙은행이 현재 준비 중인 오픈뱅킹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규제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계별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을 직접 시찰하게 하여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시스템 도입 동력 확보
◦ 여성 및 청년 초소형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등 실질적인 디지털 금융 포용 솔루션 청사진 확립
◦ 향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금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 후속 사업을 추진할 토대 마련

2024/25 KSP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린수소 산업 발전 방안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 Energy Generation)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 **협력부처**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기술혁신부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수소연합
- **세부주제**
  1. 남아공 수소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 경험 공유와 시사점
  2. 남아공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및 발전 전략
  3. 추가 연구 및 특수제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 생산의 80%를 석탄에 의존하며 노후 설비로 인한 만성적 전력난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과제 직면
◦ 세계 최대 백금족 금속(PGM) 매장량과 우수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여, 자원 기반의 고부가가치 수소경제 및 글로벌 수출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 충분
◦ 한국의 수소경제 육성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아공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그린수소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혼소 발전 및 전략광물 연계 밸류체인 구축 기반 마련 목적

자문 내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수소 혼소 도입, 수소산업단지 클러스터화, 핵심광물 협력 등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국가 그린수소 로드맵이 존재하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관련 법·제도 미비, 기술적 격차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정체되어 있으며, 정부 중심의 제한된 거버넌스로 민간 및 해외 투자 유인 구조적 한계 노출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수소경제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특화산업단지(포항, 울산) 육성을 통해 제도·기술·산업이 통합된 강력한 생태계 확립
◦ 글로벌 해운 업계의 탈탄소화 규제(IMO, EU) 강화로 암모니아, 메탄올 등 대체 연료 벙커링 수요 급증

정책 제언

◦ 단기적으로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소 혼소(co-firing)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공급 안정성 확보 및 국제 탄소크레딧 연계 모색
◦ 석탄화력 발전이 밀집한 Mpumalanga와 백금 광산 거점인 Limpopo를 연계한 대규모 수소산업단지 개발 전략 실행
◦ 백금족 금속 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전해 장비 및 연료전지 촉매의 고부가가치 현지 밸류체인 육성
◦ 독일의 탄소차액계약(CCfD) 모델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금융 지원 설계
◦ 국가 주요 항만(Coega 등)의 청정연료 벙커링 터미널 선도 구축

성과 및 시사점

◦ 단기적 전력난 해결과 장기적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수소 혼소 및 산업단지 이행 로드맵 제공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수소생산기지 및 실증 시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도입에 대한 현지의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비즈니스 파트너링 및 1:1 미팅을 개최하여 한국 발전 공기업들과 남아공 핵심 기관 간 구체적인 B2B·B2G 파트너십 교두보 확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남아공 간 실무 협의를 유도하여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IP) 공동 창출을 위한 R&D 협력 토대 구축
◦ 전략광물 확보와 기술 연계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확립하여,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다변화 및 해상물류 거점 시장 선점 효과 창출

마다가스카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 방안

#농업 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농식품 가공(Agri-Food Processing) #수출 진흥(Export Promotion)



- **협력부처** 마다가스카르 농업축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MINAL)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부주제**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전략품목 선별 기준 및 생산성 제고 방안
  2. 마다가스카르의 농산물 가공 산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 방안
  3. 마다가스카르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마다가스카르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농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국가 쌀 발전 전략(NRDS)' 등을 적극 추진 중
◦ 극심한 가뭄·홍수 등의 기후 리스크와 인프라 및 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쌀 자급률 저하 및주요 농산물(바닐라 등)의 원료 중심 수출 한계 직면
◦ 한국의 쌀 자급 달성 및 농식품 가공·수출 정책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맞춤형 농업 생산성 제고 방안 및 수출 산업화 로드맵 도출

자문 내용

마다가스카르의 쌀 생산, 수확 후 관리, 주요 수출 농산물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수출을 아우르는 실행 중심의 통합 정책 패키지 제시

현황 분석

◦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주식인 쌀은 투입재 부족과 관개 인프라 미비로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으며, 가공산업의 부진으로 수확 후 건조·도정 단계에서 상당한 손실 발생
◦ 바닐라, 카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원료 중심의 저부가가치 수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담 마케팅 기관 및 물류 체계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1970년대 농촌진흥청 중심의 연구-지도 통합 체계와 통일벼 보급, 새마을운동을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단기간에 쌀 자급 달성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입으로 수확 후 관리 현대화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 경험 보유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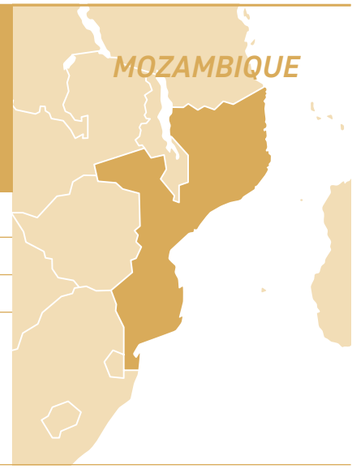
◦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중장기 정책 추진
◦ 기후 적응성과 생산성을 고려한 전략적 벼 품종 선정 기준 수립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관련 DB 구축
◦ 지역 단위 소규모 농식품 가공 거점 설립 및 중장기적 미곡종합처리장(RPC) 시범 도입
◦ 카카오·정향 등 주력 품목의 수직적 수출 조직화 지원 및 공식 수출 마케팅 전담 기관 설립,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

성과 및 시사점

◦ 기후위기 속에서 마다가스카르 농업의 구조적 병목을 진단하고, 쌀 자급 기반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정책 이행 로드맵 제공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를 통해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첨단 RPC 등 한국의 선진 농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적 실행 의지 도출
◦ 제시된 농업 육성 로드맵 및 품종 선정 체계는 향후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실질적인 농업 정책 및 시범사업 설계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 예정
◦ K-라이스벨트(K-Rice Belt) 사업, KOPIA 센터 유치 등, 농업 ODA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모잠비크 천연가스 활용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및 계획(Energy Policy & Planning)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 **협력부처**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MIREME)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사)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 **세부주제**
  1. 모잠비크 NGV 및 충전소 보급 전략 분석
  2. 모잠비크 NGV 및 충전 인프라 분석과 한국의 NGV 및 충전 인프라 구축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NGV 확대 방안 연계사업

사업 배경 및 목표

- 모잠비크는 세계 최상위권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송 부문이 석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외화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 상존
- 정부는 생산 천연가스의 25% 내수 소비를 의무화한 '로컬 콘텐츠 법'을 바탕으로, 단순 자원 수출을 넘어 천연가스 차량(NGV) 보급을 핵심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설정
- 한국의 성공적인 NGV 보급 모델 및 안전관리 규제 경험을 공유하여, 모잠비크 환경에 최적화된 충전 인프라 확충, 차량 개조 활성화, 기술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단계적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모잠비크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NGV 보급 시범사업, 분산형 인프라 구축, 표준화된 안전검사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CNG 충전소가 가스 배관망이 있는 수도권 일부에만 국한되어 전국적 확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기술 규격, 충전소 운영 매뉴얼 및 내압용기 정기검사 등 필수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전무하여 사업의 운영 불안정성 고착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NGV 보급 달성 성공. 한국가스안전공사(KGS)를 통한 충전소 안전기준 제정 및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내압용기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높은 생태계 확립

정책 제언

- 마푸투·마톨라 등 수도권의 공영버스 및 공공차량을 타깃으로 한 NGV 전환 시범사업 선제적 실행
- 배관망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허브 충전소에서 트레일러로 가스를 운송하는 분산형(Mother-Daughter) 충전 인프라 모델 도입
- KGS 안전 코드 및 한국의 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국가 표준 설계 및 법제화
- 에두아르두 몬들라네 대학(FU-UEM)과 연계한 NGV 정비·검사 핵심 기술 인력 양성 센터 구축
- 인프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투자(PPP) 혼합형 재원 조달 모델 적용

성과 및 시사점

- 수송 부문 NGV 확대를 위한 단기(시범사업), 중기(지방 확산), 장기(산업화) 3단계 로드맵을 완성하여 국가 에너지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이행 방안 제공
- 주요 정책결정자 방한 연수 및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의 첨단 가스 안전 인프라를 체험하게 하여 제도 기반의 기술 도입 동력 확고히 확보
- 한국 민간기업과 모잠비크 현지 NGV 기업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직접 지원하여 기술 교류 및 후속 비즈니스 창출 파트너십 확립
- 기존 원자재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입 연료 대체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및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 있는 청사진 완성
-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한 대규모 NGV 인프라 투자 후속 사업 타당성 기반 마련

에티오피아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농업 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에티오피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
- **사업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사업수행기관** 이암허브-한국기업지식연구원 컨소시엄
- **세부주제**
  1. 에티오피아 스마트 농업 현황 분석
  2. 한국의 스마트 농업 개발 경험 분석
  3.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지역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 구상

사업 배경 및 목표

-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63%, GDP의 32%를 농업이 차지하는 농업 중심 경제 구조이나, 전통적 소농 중심의 영농 방식과 심각한 기후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
-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 적응을 위해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나, 기술과 기초 인프라의 부족으로 스마트 농업 도입의 초기 단계 수준
- 한국의 단계별 농업 발전 및 스마트 농업 선도 경험을 참고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생태구역(Agro-Ecological Zones)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적응형 스마트 농업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시범 프로젝트 구상

자문 내용

에티오피아 전역을 9개의 농업생태구역(AEZs)으로 구분하여 기후·토양·수자원 조건을 분석하고 스마트 농업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저비용·혼합농업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 전략 제시

현황 분석

- 에티오피아 농업은 강우 의존도가 높고 농기계화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소농 중심 구조로 농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및 농민들의 낮은 디지털 역량으로 첨단 시스템 즉각 적용에 난관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식량 자급 중심의 생산 확대, 개방·경쟁력 강화, 디지털·지속가능성 기반의 혁신을 거치며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스마트 농업 육성법」제정은 기술·인프라·인력·데이터 거버넌스와 교육·제도적 지원을 통합한 스마트 농업 구축 모델로 평가

정책 제언

- 에티오피아 인프라 및 기술 제약을 고려하여 태양광 기반 관개 및 저비용 센서 등 '저비용·모듈형' 적정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의 단계적 도입 권고
- 기후 조건과 시장 접근성이 양호한 아다(Ada) 지역에 원예, 축산, 식량작물, 가공을 아우르는 '혼합농업 기반 스마트 농업 시범 클러스터' 조성 제안
- 정책적 지원과 ODA 및 기후 재원을 활용한 혼합금융 도입과 협동조합 기반 농기계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제언

성과 및 시사점

- 에티오피아의 기후·인프라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농업 기반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모델을 설계하고, 시범 지역인 아다(Ada)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
- 해당 시범 모델 구현 시 생산성 20~25% 향상, 수자원 및 비료 30% 절감, 농가 소득 40% 이상 증가 등 다층적인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예상
-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 농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현지 정책결정자들의 스마트 농업 도입 의지 강화
- 시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ODA 공여기관, 국제기구, 민간투자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케냐 몸바사 대중교통 및 ITS 구축 전략 사전타당성조사

#도시 교통(Urban Transport)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 **협력부처** 케냐 도시도로청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 **사업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진이엔에스㈜
- **세부주제**
  1. 케냐 몸바사(Mombasa) 지역 교통현황 및 문제 진단
  2. 몸바사 대중교통 및 ITS 구축 전략 사전타당성 조사
  3. 한국의 관련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사업 배경 및 목표

◦ 케냐 몸바사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율이 3.9%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교통망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 정체 발생
◦ 마타투(Matatu) 등 비공식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적 운영으로 인해 노선 중복,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어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개발 전략 모색 절실
◦ 한국의 선진 교통 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몸바사 맞춤형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도출 목적

자문 내용

몸바사의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편, ITS 기반 교통관리센터(TMC) 도입 및 거버넌스 재편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 제시

현황 분석

◦ 도로망 확충 부족 및 관련 기관(KeNHA, KURA 등) 간 역할 분산으로 통합적인 교통 정책 실행 한계 노출
◦ 대중교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마타투의 과잉 공급, 표준화되지 않은 정류장, 현금 위주의 요금 체계 및 신호등 미비로 인해 통행 비효율성 고착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및 간선·지선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 확보하고 교통카드 통합요금제와 교통정보센터(TOPIS)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대중교통망 시스템 달성 성공

정책 제언

◦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신호등 확충을 포함한 단기 교통체계관리(TSM) 실행 및 단계적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 도입 권고
◦ 모바일 결제(M-PESA)와 연동된 자동요금징수(AFC) 시스템에 기반한 환승 할인제 및 통합 모빌리티(MaaS) 앱 도입
◦ 실시간 교통 제어를 위한 소규모 통합교통관제센터(TMC-lite) 선도 구축
◦ 정책 효과의 정량적 검증을 위한 디지털트윈(DTP) 시뮬레이션 플랫폼 운용
◦ 다원화된 거버넌스 일원화를 위한 '교통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및 공공-민간 협력(PPP) 연계 혼합형 재원 조달 로드맵 수립

성과 및 시사점

◦ 단편적인 시설 개선을 넘어 대중교통 체계 혁신, ITS 기반 효율화, 거버넌스 통합을 포괄하는 단기·중기·장기 핵심 실행 전략(14개) 구체적 제공
◦ 디지털트윈(DTP) 기반의 교통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책 시행 전 혼잡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현지 정책결정의 신뢰성 확립
◦ 정책실무자 대상 방한 연수를 통해 서울 TOPIS 및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직접 시찰하게 함으로써 선진 스마트 교통 기술 도입에 대한 강력한 실행 동력 확보
◦ 초청 연수 중 한국 ITS 관련 민간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직접 주선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케냐 교통 시장 진출 및 협력 네트워크 토대 마련
◦ 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DCF 및 다자개발은행(WB, AfDB 등) 자금과 연계한 대규모 대중교통 인프라 후속 사업 추진 기반 확립

AfDB 공동컨설팅

기니 산업정책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중소기업 개발(SME Development)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협력부처** 기니 산업무역중소기업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SMEs, MCIPME)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산업연구원(KIET),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
- **세부주제**
  1. 기니 산업개발기금 설립 방안
  2. 기니 중소기업과 로컬콘텐츠 법
  3. 기니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구상 및 전략
  4. Think Tank: 연구기관 설립 및 개혁 방안

사업 배경 및 목표

◦ 기니는 풍부한 천연자원(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을 보유하고 광업 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가공 및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일자리 창출 및 빈곤 감소에 근본적 한계 직면
◦ 기니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해 '국가산업발전정책(PNDIG 2022-2040)'을 수립하였으며, 그 핵심 수단인 산업개발기금, 중소기업 육성, 경제특구 개발, 싱크탱크 운영의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공동컨설팅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기니 맥락에 맞는 실행 가능한 맞춤형 정책 제언 도출 및 현지 정책실무자 역량 강화 목적

자문 내용

기니 산업발전계획(PNDIG)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자원 기반 산업화 전략을 뒷받침할 산업개발기금 조성, 로컬콘텐츠법(LCL) 이행, 산업단지 거버넌스 및 정책 싱크탱크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실행계획 제시

현황 분석

◦ 기니는 자원 채굴 및 미가공 수출에 편중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며, 영세한 비공식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과 기술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 로컬콘텐츠법(LCL)이 존재하나 글로벌 기업의 요구 수준과 현지 역량 간 격차로 인해 이행률이 낮고, 경제특구(Boké 등) 거버넌스 미비와 거시경제 정책을 분석할 싱크탱크 인프라 부재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1970년대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중화학공업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성공적 활용 달성함. OEM 방식과 대기업-중소기업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고 경제기획원(EPB) 산하 KDI, KIET 등 국책 연구 기관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화 마스터플랜 기획 및 실행 성공

정책 제언

◦ 광물 수출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니산업개발기금(GIDF)'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공식화, 인프라 확충 등에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
◦ 로컬콘텐츠법(LCL)의 초점을 단순 의무 할당에서 기업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
◦ 한국의 LH공사를 벤치마킹한 공공 주도 개발 거버넌스(가칭 '기니 LH')를 구축하여 Boké 경제특구 중심의 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ONCP, CPTI)을 개편하여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Simandou 2040 프로젝트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 확립

성과 및 시사점

◦ 기니 정부가 즉각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4대 핵심 분야의 구체적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제공하여 국가산업발전정책의 실질적 실행 동력 확립
◦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주요 기업(포스코 등)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시찰하게 함으로써 기니 정책결정자들의 선진 시스템 도입 의지 고취
◦ 총리 및 다수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을 기니 산업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 단순 자문을 넘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PADIRPME)과 직접 연계하여 향후 다자 협력 기반의 실질적 후속 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

AfDB 공동컨설팅

코트디부아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를 위한 통합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

#도시 교통(Urban Transport) #디지털 결제 시스템(Digital Payment Systems)
#교통 정책 및 계획(Transport Policy & Planning)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 **협력부처** 아비장 도시교통청(Autorité de la Mobilité Urbaine dans le Grand Abidjan, AMUGA)
- **사업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사업수행기관** ㈜유아이네트웍스, ㈜한국종합기술
- **세부주제**
  1. 광역 아비장(Greater Abidjan) 도시교통체계 현황 분석
  2. 대한민국의 통합도시교통시스템 사례 공유
  3. 코트디부아르 경제·사회에 부합하는 통합요금체계 및 결제·정산시스템 정책 제언
  4. 통합도시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AMUGA 역량 강화

사업 배경 및 목표

◦ 아비장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에 직면해 있으며, 비정규 보조 교통수단(Gbaka 등) 의존도 심화
◦ 정부는 AMUGA를 신설하고 메트로 1호선 및 BRT 도입 등 대규모 교통망 확충을 추진 중이나, 운영 주체 간 분절된 요금 및 정산 체계로 인해 통합 관리에 한계 노출
◦ 한국의 성공적인 대중교통 통합요금 및 정산시스템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비장 실정에 맞는 단계별 요금·징수·정산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역량 강화 목적

자문 내용

광역 아비장의 대중교통 운영 및 요금 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요금제, 징수·정산 플랫폼 도입 및 대중교통위원회 신설을 아우르는 종합 개선 로드맵 제시

현황 분석

◦ 시내버스, 수상버스, 비공식 교통수단 간 단일요금제가 개별 적용되어 환승 할인이 전무하며, 요금별 교통카드 분리 운영으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
◦ 결제 단말기 규격 불일치, 현금 중심의 수기 정산 관행, 실시간 데이터(BIS/BMS) 부재 등으로 투명성 및 정책 확장성 한계에 직면

한국 및 글로벌 사례

◦ 한국은 2004년 대중교통 개편을 통해 거리비례제 및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중앙집중식 정산센터를 구축하여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달성 및 KS 국가 표준 규격 제정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동시 확보 성공

정책 제언

◦ 모든 교통수단에 단일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 기반 통합 요금제 및 환승 할인 단계적 도입
◦ QR 및 모바일 결제 등 징수 수단 다변화 및 호환성 인증제도 확립
◦ 수입금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정산센터 구축 및 표준운송원가 기반의 수익 배분 모형 설계
◦ 이해관계자 총괄 합의 기구인 '대중교통위원회' 신설 및 지간선 체계를 고려한 노선 개편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민간 대중교통수단 및 신규 인프라(BRT, 메트로)까지 포괄하는 연도별·단계별 기술 및 정책 통합 로드맵 구체적 제공
◦ 통합요금징수(AFC)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 명확화
◦ 정책실무자 방한 연수 및 현지 세미나를 통해 아비장 교통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선진 교통관제센터(TOPIS) 및 환승 인프라 체득 기회 제공으로 강력한 정책 실행 동력 확보

3. 2025년 KSP 행사 소식

- 2025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 2025 KSP 지역세미나
-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
- KSP 사업설명회

2025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성과공유 컨퍼런스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는 매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2007년 첫 개최 이후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분야의 국내외 정부 관계자,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 기관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2025년 성과공유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Bridging Knowledge and Prosperity for APEC and Beyond)"를 주제로 APEC 역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개회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회사와 Eduardo Pedrosa APEC 사무총장, Nguyen Van Thang 베트남 재무부 장관의 축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KSP의 주요 성과와 APEC과의 협력 의의를 공유하고, 지식 공유를 넘어 공동 창조와 공동 번영으로 확장되는 지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 재무장관 회의와 연계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KSP가 글로벌 정책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세션I] 세션 I **'APEC 역내외 혁신을 촉진한 KSP 사례'**에서는 인도네시아, 페루, 요르단의 KSP 협력 사례 발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 대외무역 디지털 전환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녹색 건축 기준 마련 등 각국의 정책·제도 개선 성과가 공유되었다. 특히 KSP를 통한 정책자문과 연구 협력이 각국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술 혁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에서 지식 공유와 정책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세션II] 세션 II **'KSP,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에서는 KSP의 발전 과정과 향후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KSP가 단순한 지식 이전을 넘어 협력국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공동 창출(Co-creation)형 협력 모델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변화 속에서 전략적 지식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민관 협력과 역량 강화, 포용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지식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025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 총합 약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행사는 APEC 재무장관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만큼 KSP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APEC 역내 국가들과의 정책 협력과 지식 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KSP가 축적해 온 지식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경험 공유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식공유를 넘어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행사 개요

주최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제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APEC과 함께 세계로
일자 및 장소	2025년 10월 21일(화), 09:00~16:00 /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병행)
프로그램	

개회식 및 기조연설	
개회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환영사	Eduardo Pedrosa APEC 사무총장
축사 I	Nguyen Van Thang 베트남 재무부 장관
기조연설	조동철 KDI 원장
본 세션 I	**APEC 역내 혁신을 촉진한 KSP 사례** - 좌장: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발표 1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 쿠르냐 루사드, GGGI 인도네시아 사무소 도시·탄소가격정책 선임담당관
발표 2	**페루 원산지 증명·관세시스템 구축** - 클라우디아 기예르미나 파라 실바, 페루 통상관광부 대외무역원활국 총괄국장
발표 3	**요르단 그린빌딩 분야 역량강화** - 사우산 바와레시, 요르단 왕립과학협회 태양열 및 에너지효율부 과장
토론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 밤방 브로조네고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본 세션 II	**KSP,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전체 토론	**좌장** - 고형권 前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토론자** - 최창용 서울대학교 교수 - 잔피에로 레온치니 중남미 개발은행 부총재 - 황기연 KAIST 초빙교수
폐회사	- 민경설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 (現 혁신성장실장)





2025 KSP 지역세미나

지역세미나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KSP 지역세미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지역별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국과의 정책 대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KSP는 2012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며, 역내 협력국 고위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공공·민간 전문가 간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왔다. 2025년 KSP 중남미·카리브 지역세미나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이 직면한 생산성 정체와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Digit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축적된 KSP 정책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개회식 및 기조연설] 개회식에서는 UN ECLAC 사무차장 Javier Medina Vásquez의 환영사와 최병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과장(現 개발사업협력과장)의 개회사를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KSP가 중남미 지역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해 온 경험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UN ECLAC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이 직면한 생산성 저하,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지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1] 세션 I **'디지털 혁신 강화: KSP 기반 한국 정책 경험과 중남미 협력'**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KSP 협력 성과가 공유되었다. UN ECLAC는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온두라스의 디지털 시민등록 시스템, 칠레의 디지털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페루의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사례 등 KSP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소개되었다. 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이 중남미 지역의 행정 효율성 및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션2] 세션 2 **'KSP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한-중남미 경제 파트너십 확대'**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UN ECLAC는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결합한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파라과이 의료기기 관리·인증제도 개선,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 육성, 우루과이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전략 지원 등 KSP 연계 성과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KSP가 정책자문을 넘어 투자·산업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025년 KSP 중남미·카리브 지역세미나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공공·민간 전문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KSP가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정책 협력을 심화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제기구(UN ECLAC)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삼각 협력 및 공동 연구 등 지식 공유의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KSP의 지역 기반 지식 협력 모델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행사 개요

주최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 ECLAC)
주제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Digit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일자 및 장소	2025년 9월 9일(화), 09:00~16:40 / 칠레 산티아고 UN ECLAC 본부
프로그램	

개회식 및 기조연설	
개회사	최병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과장 (現 개발사업협력과장)
환영사	Javier Medina Vásquez (UN ECLAC 사무차장)
축사	김학재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
기조연설 I	**지속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KSP의 기여: 중남미 협력의 경험과 확장** -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기조연설 II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정책 대응: ECLAC의 시각과 지식공유 협력의 가능성** - Javier Medina Vásquez, UN ECLAC 사무차장
본 세션 I	**디지털 혁신 강화 – KSP 기반의 한국 정책 경험과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 좌 장: 홍성창 실장(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발표 1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생산성 패러다임: 중남미 국가를 위한 정책 과제** - Sebastian Rovira, UN ECLAC 생산개발국 디지털 전환 담당관
발표 2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디지털 등록 시스템 도입** - Rider Calix 온두라스 사회개발부 대외협력국장
발표 3	**칠레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 María José Letelier Ruiz 칠레 보건부 디지털헬스과 과장
발표 4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 Claudia Parra Silva 페루 통상관광부 국장
토론	**[토론1]** 한국-온두라스 디지털정부협력센터(DGCC) 최승원 센터장 **[토론2]** Rodolfo Manuel Gómez Rodríguez 콜롬비아 국가측정표준원 최고기술책임자
본 세션 II	**KSP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한-중남미 경제 파트너십 확대** - 좌장: 김현욱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 1	**중남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적 우선과제와 KSP 협력 가능성** - Marco Llinás UN ECLAC 생산개발국 국장
발표 2	**파라과이 의료 기기 관리 시스템 및 인증제도 자문** - Aníbal Giménez Kullak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국장
발표 3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 육성 방안** - David Medianero Burga 페루 생산부 정책국 국장
발표 4	**우루과이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전략지원** - Carolina Mena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 코디네이터
토론	**[토론1]** KOTRA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장 **[토론2]** Vladimir Pimentel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투자청 국장
폐회식	
폐회사 1	- Javier Medina Vásquez UN ECLAC 사무차장
폐회사 2	-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인사이트 세션	**KSP, EIPP, KSP+ 사업 설명회**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

'2025 KSP 성과관리 세미나'가 2025년 9월 19일(금)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KSP의 '지식 기반형 경제협력 촉진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현장에는 재정경제부와 KDI, 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총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최 결과 및 시사점

[세션 1] 세션 1 **'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 모색'**에서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KSP 사례가 발표되었다. 영국의 'AI 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도출'과 슬로바키아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네트워크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례를 통해 지식 공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KSP 성과를 '공유된 지식 – 실행된 지식 – 파급된 경제효과'의 3단계 구조로 체계화하고,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선 포트폴리오 관점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세션 2] 세션 2 **'공공-민간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에서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개선'과 '칠레 디지털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후속사업 연계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은행, KOICA, KOTRA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KSP 자문 이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EDPF(경협증진자금)·KOICA 시범사업 등으로 후속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 진출 전략을 반영해 민간 참여와 사업화 연계를 선제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에 '연계 가능성(connectivity)' 항목을 추가할 것도 제안되었다.







행사 개요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
일자 및 장소	2025.9.19.(금) 14:00-16:00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호텔 세미나룸
참석자	재정경제부 및 총괄기관 KSP 관계자 총 30여 명
프로그램	**| 1세션 |** 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 모색 **| 2세션 |** 공공-민간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KSP 사업설명회

KSP 사업설명회는 협력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KSP 사업 신청 절차와 사업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규 정책자문 수요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사업신청서는 협력국의 정책 현황과 정책자문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KSP 신규사업 기획 및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 신청 절차는 매년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국에 서면으로 안내되지만, 정책자문 사업 및 다양한 KSP 사업 유형(긴급요청사업 및 KSP Plus)에 대한 협력국 담당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협력국 관계자의 KSP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신청을 지원하고자 2025년 10월 21일(화) KSP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는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책 자문을 넘어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 KSP의 역할을 소개하고 신규 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설명회에서는 협력국이 KSP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후속협력 사업 기획(Follow-up Project), 민간 부문 투자 등 실질적 경제협력(Economic Partnership)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유형별 대표적인 국별사업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협력국에서 정책자문 결과가 후속 협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KSP 정책연구와 네트워킹 활동이 정책 수립과 경제협력 성과를 연결하는 촉매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명회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몰도바, ADB 측 관계자와의 1:1 멘토링 세션을 통해 사업 제안서를 준비 중인 협력 대상국 관계자들에게 사업신청서 접수절차 및 작성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산업협회에서 '반도체 및 전자산업 국가 R&D센터 설립 전략 수립' 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성공적으로 접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향후에도 협력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1:1 멘토링 또는 소규모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KSP 사업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개요

주최	재정경제부
일자 및 장소	2025년 10월 21일(화) 14:00-15:00 /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프로그램	- KSP 소개 및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안내 - 협력국 관계자 1:1 멘토링



4. KSP 성과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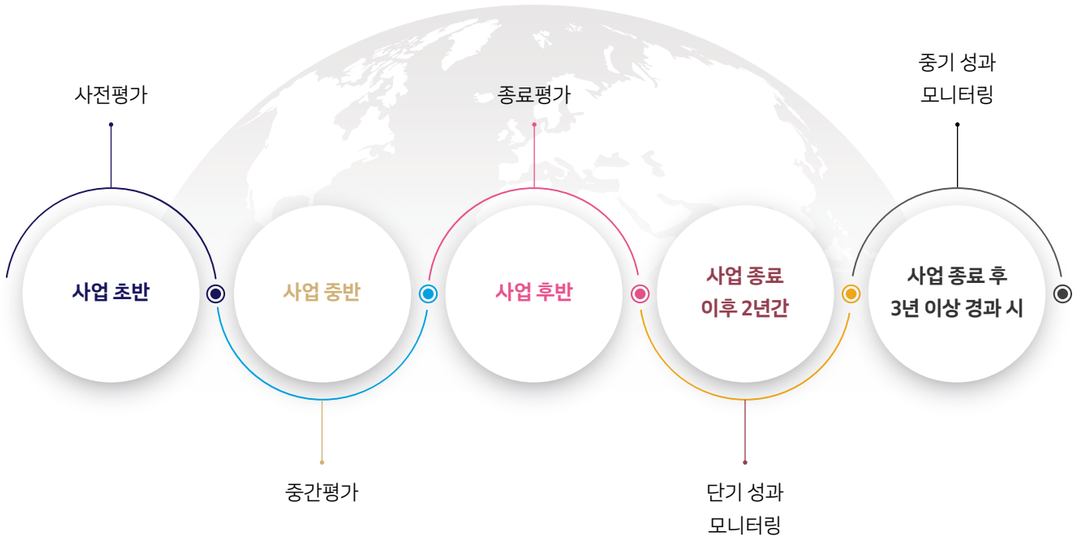
- KSP 중기 성과 모니터링

KSP 성과 모니터링

추진 배경

KSP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국의 정책적 애로사항을 기초선(Baseline)으로 설정하고, 종료 후에도 성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다. 성과 모니터링은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운영된다. 단기 모니터링은 종료 후 2년 이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중기 모니터링은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업 중 정책적 중요도와 성과 가시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수행한다.

도출된 성과는 정책 반영, 개발협력 촉진, 경제협력 촉진의 3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며, 우수 사례는 KSP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성과 요인과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 기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참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재가동하여 KSP의 핵심 자산인 글로벌 전문가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SP 성과 분류

대분류	중분류	
협력 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법률, 규정 수립
		정책문서, 예산 수립
		기관, 조직 설립(개편)
		정책 이행, 실무 활용
		기타(정책관계자 홍보, 정책 네트워킹 강화, 역량 강화 등)
경제협력 촉진		민간기업 연계(영업 기회 탐색, 타당성조사 등)
		CSR
		현지 기업 지원
		직접투자
		공공-민간 경제협력
		사업 환경 개선
개발협력 촉진	국내 후속 협력	상호협약(MOU, LOI 등)
		전문가 파견
		후속 교육/연수
		후속 부처(기관) 사업 협의
		기술지원(KSP, EIPP, KOICA 등)
		기타 ODA 사업(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사업)
	국제기구 등 후속 협력 연계	기술지원(국제기구)
		금융지원(차관, 증여, 인프라, PPP 등)
		KSP 국내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



말레이시아 경제부, '2018/19 KSP-ADB 말레이시아 산업화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성과추적 면담



페루 교육부, '2019/20 KSP 페루 교육분야 ICT 활용방안' 성과추적 면담

2025년 중기 성과 모니터링

2025년 중기 성과 모니터링은 페루,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3개국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말레이시아·페루·쿠웨이트 3개국 모두 정책 권고가 실제 제도 설계 및 입법 단계와 긴밀히 연계되며 고도화된 성과를 창출하였다.

페루는 기술보증제도(PTRS) 도입, 공공 인사·성과관리 체계 법제화, 전자통관 단일창구 시스템(VUCE 2.0) 고도화, 경제특구 관련 법안 반영 등에서 KSP의 정책 제언이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KSP 권고안이 후속 시범사업 → 국제기구 협력 → 정부 간 MOU → 국회 법안 심의로 연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결정 및 입법 단계에 구조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산업 고도화, 디지털 전환, 철도 안전, 수소 산업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KSP 제언이 상위 국가계획(신산업마스터플랜 2030, 국가 디지털 전략)과 연계되며 법·제도 개정, 전담 부처 신설, 기술표준 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부 신설, 정부 간 데이터 공유 법제 정비, 철도기술표준(MRIS) 도입, 사라왁 수소 관련 법 개정 등은 정책 권고가 조직·규범·인프라 차원의 실질적 변화를 수반한 사례로 평가된다.

쿠웨이트는 공공투자 심사 체계 도입과 재정 개혁 과제를 정부실행계획(2023-2027)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절차의 구조화와 재정 관리 기준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법·조직 개편 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정책 학습과 내부 기준 정립, 실행 절차 명문화 등 제도 설계 역량 강화의 중간 단계 성과가 확인되었다.

주요 시사점

3개국 사업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KSP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결정짓는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전략적 정합성

협력국의 정책 수요가 국가 중장기 전략 및 재정·행정 체계와 일치할수록, 법·제도 개정, 조직 신설, 국가계획 반영 등 고차원적 성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 성과 창출의 핵심 변수

고위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Ownership), 전담 수행기관의 역량,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가 성과의 심도와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성과의 단계적 확장성

연구조직 설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통계 기반 정비 등 초기 성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후속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뒷받침될 때 국가 차원의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성과 모니터링 주요 결과

페루

사업연도	성과 분류	기초선(정책 현황)	중기 성과
2017/18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보증체계 부재로 정책·금융 연계 불가능	PTRS 기술평가모형 도입 및 DB 기반 기술보증기금 조성
2019/20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디지털 인프라 부족·교사 역량 미흡·행정 시스템 부재 등 교육 디지털화가 초기 단계	'ICT 가이드라인' 제정 및 디지털 문해력 국가전략 반영
2020/21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15개 인사제도와 400여 개 임금체계 혼재로 공직 전문성·책임성·성과관리가 미흡	성과관리 기반 인사 체계 도입 등 공무원법 개정,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1단계 구축 및 34개 기관 시범 운영
2021/22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및 국내 후속 협력	원산지 규정 복잡성과 교육·시스템 미비로 FTA 활용률 저조	원산지 교육·매뉴얼 제작, 전담 인력 확보, VUCE 2.0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자문을 2024/25 KSP 후속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기반 강화
2022/23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법제 미비와 권한 분산으로 경제특구 운영 실적 저조, FDI 유치 제한	경제특구 법안에 KSP 제언(입지·세제·거버넌스) 직접 반영

말레이시아

사업연도	성과 분류	기초선(정책 현황)	중기 성과
2018/19, 2021/22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제조업 정체, 디지털 전환 지연, 데이터 관리 체계 부재 등 구조적 제약 지속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신설 및 데이터 공유법 제정(2024), Cyberjaya 클러스터 고도화 과정에서 판교 모델 벤치마킹
2022/23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기술 기준 부재, 사고 조사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철도 안전 체계 구조적으로 취약	철도 안전 관리 제도 정비, 16개 기술표준 제정 및 검증 절차 도입
2023/24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법·제도 미비, 정책 조정 기능 부족, 거버넌스 불확실성으로 수소 산업 추진 기반이 취약	수소 규제 위한 가스보급법 개정, 규제기관 지정, 수소 인프라 구축, 전담 예산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쿠웨이트

사업연도	성과 분류	기초선(정책 현황)	중기 성과
2014/15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경제 다각화 실패·노동시장 경직·단독주택 편중	쿠웨이트주거복지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 기반 형성 및 신도시 설계 용역 후속 연계
2015/16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공공투자사업 선정 절차 부재, 담당 역량 부족, 재정 비전 미흡	3단계 사전평가 프로세스 도입,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
2022/23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복지·보조금 확대와 재정 비효율로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	재정개혁 7대 분야가 정부실행계획(2023-2027)에 반영, 보조금 모니터링·세제 개편·예산제도 정비 추진

[별첨]
2024/25 KSP 사업 목록

2024/25 KSP 사업목록

<사업 유형>
· **양자:**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G2G) 양자 협력 방식의 정책자문 사업
· **공동컨설팅:** 국제기구와 연계한 삼각 협력 방식의 공동컨설팅 사업

KSP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25년 KSP 양자 사업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라오스	라오스 금융시스템 혁신 지원	KDI	라오스중앙은행 (Bank of the Lao PDR)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 하수처리 기본계획	KOTRA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라오스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운영체계 개선사업 (2차)	KOTRA	공공사업교통부 민간항공국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력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실증	KOTRA	사바전력청 (Sabah Electricity SDN BHD)
몽골	몽골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KDI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은행연합회 (Mongolian Bankers Association)
몽골	몽골 중공업 발전 전략	KDI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베트남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법 체계 수립	KEXIM	호치민시 도시철도관리위원회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 유지관리 훈련센터 설립	KEXIM	호치민시 도시철도공사1 (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s No.1 Company)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녹색투자 이행전략 수립	KDI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이행 평가방법론 강화	KDI	국가감사위원회 (Finance and Development Supervisory Agency)
캄보디아	캄보디아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공사 운영 개선 방안	KDI	신용보증공사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Cambodia)
태국	태국 데이터기반, 시민중심 혁신을 통한 선진스마트시티 구축-나콘시탐마랏 사례	KDI	디지털경제진흥원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필리핀	필리핀 청정·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KOTRA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호주	호주 NSW-한국 수소 공급망 협력	KDI	NSW 주정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NSW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유럽·중앙아시아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세르비아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수립	KDI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스페인	스페인 바스크주 P5G 도입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KOTRA	바스크무역투자청 (Basque Trade & Investment)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혁신산업 발전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	KDI	슬로바키아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혁신에너지청 (Slovak Innovation and Energy Agency)
영국	영국 한-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	KDI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를 위한 정책기술제언 (2차년도)	KOTRA	우즈베키스탄 건설공공주택서비스부 (Ministry of Consultation,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 생활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KEXIM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 (Ministry of Ec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혁신생태계 발전방안	KDI	경제환경농업부 (Ministry of Economy, Environment and Agriculture)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테크노파크 운영방안 및 활성화 전략 마련	KDI	스플리트시 도시개발부 (City of Split) 스플리트시개발공사 (Development Agency Split)
키르기즈 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 공공투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KDI	경제상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튀르키예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KDI	중소기업진흥청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
폴란드	폴란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	KDI	경제개발기술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중남미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국세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 모델 개선 방안	KDI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콰도르	에콰도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KOTRA	교통공공사업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Public Works)
온두라스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디지털 등록 시스템 도입	KDI	사회개발부 (Secretariat of Social Development)
온두라스	온두라스 인프라 및 교통 정보시스템 개발전략 수립	KDI	인프라교통부 (Secretaria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콜롬비아	콜롬비아 과학 및 산업 분야 디지털 측정 전환 컨설팅	KDI	콜롬비아 국립계량연구소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쿠바	쿠바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전략	KOTRA	과학기술환경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페루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KDI	통상관광부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페루	페루 조선산업 및 연계산업군 육성방안	KOTRA	생산부 (Ministry of Production)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오만	오만 전력계통 보강 컨설팅	KOTRA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요르단	요르단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 설계	KOTRA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금 (Jordan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Fund, JREEEF)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그린수소산업 발전방안	KOTRA	과학기술혁신부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 육성 방안	KDI	농업축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모잠비크	모잠비크 천연가스 활용체계 구축	KOTRA	광물자원에너지부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KDI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케냐	케냐 몸바사 대중교통 및 ITS구축 전략 사전타당성조사	KOTRA	도시도로청 (Kenya Urban Roads Authority)

2024/25년 KSP 공동컨설팅 사업

ADB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수립 지원	KEXIM	도시개발위원회 (Urban Development Committee)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고등교육의 혁신허브 전환 - 숨가이트국립대를 중심으로	KEXIM	과학교육부 (Ministry of Science and Education)

AfDB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기니	기니 산업정책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KEXIM	산업무역중소기업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SMEs)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를 위한 통합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	KEXIM	도시교통청 (Autorité de la Mobilité Urbaine dans le Grand Abidjan)

CAF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쿠엔카 이동량관측소를 통한 도심교통관리 강화	KEXIM	쿠엔카 시정부 (Municipality of Cuenca), 쿠엔카교통공사 (Cuenca Municipal Public Company for Mobility, Transit and Transportation)

EBRD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키르기즈 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로드맵 수립	KEXIM	비슈케크 상하수도관리국 (Bishkek Water Company, Bishkekvodocanal)
모로코	모로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수립	KEXIM	모로코 중앙은행 (Bank Al-Maghrib)

GGGI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KEXIM	국가개발기획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IDB

국가	주제명	총괄기관	협력부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디지털 인프라 활용방안 공동자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市 홍수 조기경보 및 배수시스템 개선	KEXIM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인프라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the City of Buenos Aires)
콜롬비아	콜롬비아 기후탄력적 도로 인프라 조성	KEXIM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파라과이	파라과이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현대화	KEXIM	공공사업통신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s)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